

통일한국의 민주적 정당제도 발전방향

배정호 외

2012. 10. 31

통일한국의 민주적 정당제도 발전방향

2012. 10. 31

연구책임자: 배정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상봉(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주성해(동아일보 기자)

주용식(중앙대학교 부교수)

황재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사관)

제 출 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통일한국의 민주적 정당제도 발전방향”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0월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독일사례 분석>

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 집권 후 동구권에는 강력한 개혁·개방의 바람이 불었다. 이 변화의 바람에 편승한 동독인들은 한편으로는 동독 탈출을 감행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를 결성해 조직적으로 공산정권에 저항했다(월요데모).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친 사회주의통일당(SED)은 호네커 서기장을 축출하고 개혁공산주의자를 등용해 난국을 타개하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동독인들의 저항은 더욱 강렬해졌고 베를린 장벽은 붕괴되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시민단체들은 원탁회의를 만들어 사통당 새 지도부와 공동으로 국가 현안을 처리했다. 동독에 최초의 자유선거가 치러지게 되었고 서독과의 통일을 목표로한 조치들이 차근차근 추진되었다. 1990년 3월 18일 최초의 자유선거가 치러졌다. 선거에는 2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였다. 뉴포럼 Neues Forum, 민주봉기 Demokratischer Aufbruch, 민주주의 지금 Demokratischer Jetzt, 동맹 90 Buendnis 90, 이니셔티브 평화와 인권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등과 민사당(PDS)으로 개명한 사통당도 참여했다. 또한 서독 정당의 개입으로 동독 사통당의 위성정당으로 머물러있던 동독 기민련(Ost-CDU) 등 정당들도 사통당과 결별하고 선거에 출마했다.

선거결과 동독 기민련이 주축이 된 독일연합 Allianz fuer Deutschland이 48%를 득표해 드메지어 총리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드메지어 정권은 헬무트 콜 총리와 통일협상을 추진해 통일조약(통일합의서)을 체결하고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을 완성했다.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의 남북한 정당구조>

통일과정에서 정치통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북한 주민의 남

한에 대한 정치동기화다. 그리고 정치갈등의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변수는 1) 남북 간의 정당통합과 남남갈등 2) 외세, 특히 중국의 개입여부이다. 독일통일에서와 같이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정치동기화가 강할수록 통일의 속도와 통합의 정도가 커질 것이다. 점진적 통일의 경우 급진적 통일에 비해 북한 주민들의 남한의 배타적 정통성에 대한 정치동기화가 약하게 나타나기 쉽다. 또한 통합과정에서 남북간 이해의 차이가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정치동기화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 통일은 난항을 겪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국내정치구조 하에 중국의 개입은 북한의 입장을 강화시키며 예멘과 같이 남북은 또 다른 분단의 연장선 상에서 새로운 갈등구조를 극복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통일을 우선적으로 이루고 통합을 이루어야 하며, 통합과정에서도 독일통일의 경우와 같이 선 통합 후 이해조정을 통해 남북간의 정치갈등을 먼저 완화시키고 한반도 차원의 정당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지역의 민주화 및 민주적 정당 활동 기반 조성 및 지원 프로그램>

김정일 체제가 존속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민주화 및 민주적 정당 활동 지원은 요원하다. 북한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외부적 노력은 대북방송 등 북한 주민의 계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붕괴해 급작스러운 통일이 찾아오는 상황에서는 한국 등 외부세계가 선거와 선거과정, 정당제도 구축, 의회구성, 사법제도 완비, 시민사회 구축, 자유언론 육성, 시장경제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 붕괴로 인한 통일이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분야별로 북한 현실에 기초한 정확한 지원 방법과 그로 인한 결과 등을 도출하였다.

목 차

I. 서론	1
II. 독일 사례의 분석	2
1. 급변기 동독의 정치사회 상황	2
가. 동구권 정치 상황	3
나. 탈동독 행렬	4
다. 월요데모와 호네커 축출	6
라. 동독 자유선거	9
마. 선거결과 분석	13
2. 독일통일 과정에서 정당의 정치적 변혁 사례	15
가. 서독 정당의 활동	15
나. 동독 정당의 변화	16
다. 통일 후 정치상황	23
3.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28
III.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의 남북한 정당구조	31
1. 남북한 정당제도의 변천과 현황	31
가. 이론적 배경: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분단구조 하의 정치구조	31
나. 해방 이후 분단구조 형성기의 남북한 정치구조	37
2.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정치 갈등과 정당구조	42
가. 해방 직후 분단구조형성과정의 통일시기 분단해체과정에 대한 시사점	42
나. 분단구조 고착시기의 남한 정치구조가 미치는 영향	46
다. 독일 모델의 시사점	48
라. 예멘 통일의 시사점	55
마.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정치 갈등과 정당구조	59
바.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정당구조	61
3. 맺음말	63

IV. 북한 지역의 민주화 및 민주적 정당 활동 기반 조성	65
1. 통일전후 북한 지역의 정치적 상황 전망	65
가. 이론적 통일 시나리오 고찰	65
나. 정치 체제 변화에 따른 통일 전후 북한의 정치적 상황 및 주민의식 고찰	69
2. 북한 지역의 민주화 및 민주적 정당 활동 기반 조성	78
가. 김정은 체제가 존속하는 상황	78
나. 김정은 체제가 붕괴해 급작스러운 통일이 찾아오는 상황	81
다. 북한에 민주주의적 발전을 지향하는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109
참고문헌	111

1. 서론

남북한은 지난 64년간의 분단으로 인해 정치적, 이념적 격차가 매우 크다. 남북한의 통합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적 격차를 극복하는 정치적 통합은 국민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이념적 격차를 극복하는 정치적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남갈등과 더불어 남북갈등이 초래될 수 있고, 계층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과정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치적, 이념적 격차를 극복하고 북한지역의 민주화 및 민주적 정당의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제II장에서는 독일 사례를 분석한다. 즉, 급변기의 동독의 정치사회 상황에 대해 분석한 후, 독일통일과정에서 정당의 정치적 변혁에 관해 분석하며, 나아가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의 남북한 정당구조에 대해 분석한다. 즉,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남북한 정치 정당제도의 변천과 현황에 관해 분석한 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정치 갈등과 정당구조에 대해 연구한다.

제IV장에서는 북한 지역의 민주화 및 민주적 정당의 활동 기반 조성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 이전과 이후 북한 지역의 민주화 및 민주적 정당 활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가능한 시나리오에 기초한 현실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II. 독일 사례의 분석

1. 급변기 동독의 정치사회 상황

동독의 정치적 상황은 1980년대 중반 급변하게 된다. 고르바초프 집권 후 동독은 물론 모든 동유럽 국가에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게된 것이다. 동유럽 국가와 달리 분단국 동독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강력한 서독의 보이지 않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¹⁾ 서독의 풍요로운 체제를 동경하는 동독인들이 그들의 의지를 행동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탈동독 러시가 시작된 것이다. 물론 1948년 분단된 이래 동독을 탈출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았지만 80년대 중반에 시작된 탈동독 러시는 조직적이었고 단호했다. 동베를린 주재 서독대표부로 주민들이 몰려들었고²⁾ 폴란드, 체코 등 주변국들은 동독 탈출의 경유지가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헝가리를 경유한 동독 청년들의 탈출은 베를린 장벽의 해체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헝가리가 동독 탈출의 주요 루트로 알려지자 동독인들의 탈출 러시는 더욱 강해졌다.

동독 내에서는 전통 야당 도시 라이프치히(Leipzig) 니콜라이(Nikolai) 교회를 중심으로 반공산 시위가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월요일마다 시민들이 모여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게 되었다. 소위 월요데모(Montagsdemonstration)다. 월요데모는 라이프치히를 넘어 주변 도시로 확대되었고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월요데모는 많은 시민들의 주권 의식을 새롭게 했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1) 독일의 주요 언론은 고르바초프의 역할에 대해 “독일에는 통일의 가능성을 열어준 반면 소련에 대해서는 장례를 선고(Sargschreiner der UdSSR)했다”고 전한다. *Sueddeutsche Zeitung* (2001.8.17).

2) 박상봉, 『독일통일 통일한국』 (서울: 진리와자유, 1999), p. 77 이하.

결성되었고 공산세력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거듭났다. 동독 공산당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위성정당과 단체들도 새 시대에 걸맞은 정당과 단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해외로부터 체제전환 물결이 몰아치고 내부적으로 탈동독 러시가 일어나는 가운데 동독 공산정권은 베를린 장벽 해체라는 마지막 카드를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9년 11월 9일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동독인들이 밤새도록 서베를린으로 몰려들었다. 서베를린 시내는 축제의 장이 되었고 동서독 주민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기뻐했다. 중심가 쿠담 사거리는 밤새 동서독 주민들이 어울려 기쁨을 나누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콜 총리를 비롯한 서독 정치인들이 통일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고 콜 총리는 동독에 문제해결 10개항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10개항 프로그램은 동독 정권을 변화로 몰아갔고 동독 공산당의 해체를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정당, 시민단체들이 만들어지고 민주적 정당으로 발전해 갔다.

가. 동구권 정치 상황

소련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근간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방·개혁을 천명하게 되었다. 정당 및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고 자유선거가 실시되며 체제전환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동구권의 개혁·개방의 흐름은 미소 양국의 군축과 평화 회담을 통해 더욱 거세게 흘렀다. 1989년 12월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몰타에서 만나 장거리 핵무기의 50% 감축에 합의하면서 냉전종식을 공식 확인하고 동서화해시대를 열었다(몰타회담).

미소 간 탈냉전의 바탕 위에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도 가속화 되었다. 폴란드에는 솔리다르노스크라는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노조 연대가 변화를 주도했다. 1980년 단찌히(Danzig) 레닌 조선소에서 시작된 노동운동이 발판이 된 솔리다르노스크

는 80년대 후반 공식적으로 폴란드 공산정권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국정 운영에 동참하며 바웬사(Lech Walesa)는 1990년 자유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체코는 학생과 예술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반체제 작가 하벨(Havel)의 주도 하에 개혁·개방이 이루어졌다. 공산정권에 저항해 헌장 77(Charta 77)³⁾의 핵심 인물로 반사회주의 혁명(Samatenen Revolution)을 이끌었다. 이 공로로 하벨은 1989년 체코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런 동유럽의 변화는 미국과 서독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 특히 헝가리는 1989년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하는 결정을 내려 독일 통일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나. 탈동독 행렬

1989년 여름 조직적인 탈동독 행렬이 만들어졌다. 탈출 러시는 1989년 8월 8일 동독 주민 131명이 동베를린 주재 서독대표부로 탈출하며 본격화되었다.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주재 서독 대사관이 탈출 통로로 이용되었다. 외교공관에 들어간 동독주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외치고 서독으로의 자유로운 여행을 동독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헝가리를 경유한 오스트리아로의 탈출은 베를린 장벽 해체의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1989년 8월 범유럽 유니온이란 단체가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평화 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동독을 포함해 동유럽 국가들의 평화단체들이 참여했다. 행사가 끝난 후 동독 참가자 600여명이 모두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독 정부는 즉시 특사를 보내 탈출자

3) Charta 77은 1977년 시작, 지식인, 예술인, 노동자는 물론 공산정권 하에서 비밀경찰에 소속되었던 구 공산당원들도 동참했던 시민운동이자 공산당에 의해 자행되었던 인권침해에 저항했던 시민운동이었다.

전원을 서독으로 데려왔을 뿐 아니라 헝가리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국경을 개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헝가리 정부는 강력한 서독의 외교적 요구와 경제적 지원을 수용하고 동독의 요구를 묵살, 對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하는 결단을 내렸다. 당시 헝가리 외무장관 기울라 호른(Gyula Horn)은 1989년 9월의 국경개방 결정에 대해 “내 생애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술회하고 있다.⁴⁾

이것은 동독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위반하는 것이었고 관련 조약을 깨는 것이었다. 당시 헝가리 주재 동독 대사 게르트 페레스(Gerd Vehres)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호른 장관에게 “이 사안은 헝가리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독 주민의 문제로 헝가리 정부가 이렇듯 미적미적 대응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동독인들은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호른 외무장관은 “이들을 강제로 동독으로 되돌려 보낼 수 없으며 유일한 해결책은 이들을 서방으로 이주시키는 것”이라고 응답했다.⁵⁾

헝가리 정부의 대 오스트리아 국경개방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으며 이 조치가 내려진 후 2달이 채 안된 10월 말까지 2만4천여 명의 동독인들이 이 루트를 이용해 오스트리아로 탈출했다.⁶⁾

이 사건을 접한 서독 정부의 발 빠른 대응도 놀라웠다. 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로 탈출한 동독주민들을 위해 모든 가능한 대책을 수립했다. 특사를 파견하고 특별열차를 보내 모든 탈출자들을 안전하게 서독 바이에른으로 이주시켰다. 이 사건은 국내외에 충격을 불러왔고 동독에도 엄청난 파장을 주었다. 월요데모 참가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탈동독 행렬도 거세

4) *Der Spiegel*, Nr. 36 (2 September 1991).

5) 위의 글, p. 115.

6) 호른 외무장관은 대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하기로 결정한 순간을 “Freiheit, die ich meine 내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제목 하에 단행본으로 출판했다.

져 갔다. 마침내 동독 공산정권은 1989년 11월 9일을 기해 베를린 장벽을 해체할 것을 결의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다.

다. 월요데모와 호네커 축출

(1) 월요데모(Montagsdemonstration)

월요데모는 라이프치히 니콜라이(Nikolai)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기도모임으로부터 발전된 시위운동이었다. 당시 평화기도는 동독 기독교 저항문화의 표현이었고 비폭력을 그 수단으로 했다. 기독교인 뿐 아니라 일반인도 가담했던 평화기도운동은 1981년부터 시작됐고 1985년 활성화될 때까지 한 조그만 교회의 기도운동에 불과했다.

이 조그만 평화기도가 동독 공산당에 대한 저항운동의 산실이 된 것은 1988년 기도모임 후 벌인 시위 때문이다. 이때부터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기도는 늘 시위행진의 출발점이 되었고 공안당국의 관찰대상이었다. 89년 5월에는 공안경찰이 교회를 포위해 시위를 막기도 했다.

하지만 평화기도모임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라이프치히의 다른 교회로 확산되어갔고 경찰병력도 이에 비례해 증가되어 갔다. 악화일로 사회분위기 속에서 89년 9월 4일에는 평화기도가 끝난 후 최초로 동독 공산당의 독재에 저항하는 시위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약 1천명의 시위대원들은 “슈타지 사라져라”, “여행의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다면 대량탈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슈타지의 무력진압으로 70명의 재야인사들이 체포되었다. 그 이후 매주 월요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동독을 새로운 사회로 변화시킨 ‘월요데모’가 시작된 것이다.

89년 10월 9일 월요데모에는 무려 7만 명이 가담했고 최초로 동독 공안당국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위대들은 늘 ‘비폭력’을 연호했고

무력으로 시위를 중단시키려 했던 공안당국의 노력은 허사였다. 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 SED)은 공식적으로 동독교회에 정치적 행동을 삼가고 기도운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라이프치히와 함께 베를린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반공시위가 진행됐다. 89년 10월 2일에는 나치시대 저항의 대명사이자 개신교 지도자들의 민주화 운동의 산실인 동베를린 겐세마네 교회에서 정치범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고 교회 앞에서는 경고시위가 시작됐다.

호네커(Erich Honecker) 총서기는 월요데모를 당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고 무력탄압을 명령했으나 당시 상황을 직시한 당은 호네커를 축출하고 에곤 크렌츠(Egon Krenz)를 총서기로 선출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 했다. 하지만 동독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셌다. 이미 호네커의 후임으로 내정되었던 크렌츠는 개혁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에곤 크렌츠는 개혁공산주의자이자 주민들의 대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공산당 작센 지부장이었던 한스 모드로브(Hans Modrow)를 내각의 총리로 선출했다.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반세기 억눌렸던 민심을 추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독인들의 요구도 다양해져 갔다. 서독으로의 자유로운 여행에 이어 민주화 요구도 거세게 이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에 대한 요구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2) 호네커(Erich Honecker) 축출

동독 사회는 한편으로는 라이프치히, 베를린 및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개되는 시민들의 저항운동과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탈출로 일대 혼란에 빠졌다. 월요데모는 회를 거듭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시위인원이 증가하였고 10월 16일에는 12만여 명이 시위에 가담하였다. 이런 가운데 시위구호도 초기의 “Wir sind das Volk 우리가 국민이다”에서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

다”로 바뀌었다. 동독 공산당의 독재에 반기를 들며 주권을 요구하던 주민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서독과의 통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폴란드나 체코 주재 서독 대사관은 동독을 탈출한 주민들을 수용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대사관 뜰에는 임시 천막이 쳐지고 끊임없이 밀려드는 주민들을 보호했다. 상황이 이렇듯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네커 서기장은 10월 7일 동독 건국 4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건국 행사에는 소련의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참석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는 호네커와 회담을 갖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동독 공산당 SED(사통당, 사회주의 통일당)이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40주년 기념 연설에서 “Wer zu spaet kommt, den bestraft das Leben 인생이 늦게 동참하는 자를 벌하게 될 것이다”⁷⁾라며 개혁의 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설득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네커는 기념 연설을 통해 과거 40년 동안 동독이 이룩한 사회주의 혁명을 찬양하고 당시 일어나고 있던 동독인의 탈출과 반공 시위는 서독 정부의 흑색선전에 기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⁸⁾

제야 시민단체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고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989년 10월 16일에는 전 동독지역에서 약 12만 명이 참가했던 월요데모가 일어났고 그 규모에 놀린 공안경찰은 계획했던 대규모 진압작전을 수행할 용기를 잃고 말았다. 동독 공산당 SED는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1989년 10월 18일 에리히 호네커는 사통당 서기장은 물론이고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사퇴하였다. 또한 사통당 정치국은 1989년 11월 8일자로 폐쇄되었다.

7) Dokument: *Michail Gorbatschow zum 40. Jahrestag der DDR am 6. Oktober 1989.*

8) 박상봉, 『독일통일 통일한국』, p. 81.

라. 동독 자유선거

89년 가을 절정을 이룬 동독주민들의 반공산당 투쟁은 두 가지 결실을 이뤘다. 하나는 동서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킨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원탁회의(Runder Tisch)'라고 하는 시민운동 연합체를 탄생시킨 것이었다.

(1) 원탁회의(Runder Tisch)

원탁회의는 호네커의 실권 후 총서기에 오른 크렌츠 집권 시절인 89년 12월 7일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원탁회의의 주요 구성원은 정치적 변혁기에 동독의 민주시민운동을 주도했던 재야시민단체와 교회대표들이었다. 이들은 전환기 동독의 실질적인 주도세력으로 당시 혼란기의 동독의 주요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국가를 이끌었다. 이렇듯 국민과 시민단체의 뜻이 원탁회의로 모아지자 모드로브 총리는 기존의 집권자(호네커나 크렌츠)들이 대화를 거부했던 원탁회의 지도자들과의 공식대화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1990년 1월 28일에는 정부도 원탁회의에 공식 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이후 국가 통치가 원탁회의와 모드로브 정부의 이원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다. 원탁회의는 우선 공산당 SED 일당독재를 청산하고 다양한 정치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당의 '창과 방패'로 공산권력의 시녀였던 국가안전부 슈타지(Stasi)의 해체를 공론화했으며 헌법 개정과 조속한 시일 내에 동독 내 자유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동독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서독의 콜 총리도 '10개항 프로그램'⁹⁾을

9) 콜 총리 10개항 프로그램의 특징은 양독관계 뿐 아니라 유럽의 틀 속에서 동서독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부 5개항은 동서독 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후반부 5개항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기본틀 속에서 독일문제를 다룬다는 내용이다.

제시해 모드로브 정부를 압박했다. 단계별 통일을 주장하며 우선 동서독 간 조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¹⁰⁾를 만들자는 동독의 모드로브의 제안은 묵살되고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되었다.

(2) 독일연합(Allianz fuer Deutschland)의 압승

동독 유권자 총 1,220만이 참가하게 될 최초의 자유선거에는 변화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혼란기에 생겨난 20개 정당과 여러 정치적 그룹들이 참여해 주민들의 심판을 기다렸다. 동독 기민련 CDU, 독사련 DSU(서독 기사련과 유사), 민주봉기 Demokratischer Aufbruch 등 3개 정당이 연합한 독일연합 Allianz fuer Deutschland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독 사민당 SPD와 공산당 SED의 후신인 민사당 PDS도 출사표를 던졌다. 서독 녹색당 Gruene의 지원을 받던 동맹 90 Buendnis 90, 자유민주연대 BFD(Bund Freier Demokraten)와 여러 군소 정당들도 참여했다.

동맹 90에는 뉴포럼 Neues Forum, 이니셔티브 평화와 인권 IFM(In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및 민주주의 지금 Demokratie Jetzt 등이 연합했다. 또한 자유민주연대는 동독 위성정당 LDPD, 독일포럼정당 DFP 등이 연합한 서독의 자민련 FDP와 유사한 정당이다.

이 선거의 최대 쟁점은 미래에 있을 통일에 관한 사안으로 어떠한 형태의 통일을 추진하며 어떤 속도로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동독 기민련 CDU는 서독 기본법 23조¹¹⁾에 따라 동서독 통일을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10) 모드로브 총리는 통일을 전제로 서독과 동독이 조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를 이루자며 동독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150억 마르크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콜 총리는 모드로브의 제안을 거절하고 '10개항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11) 기본법 23조는 다음과 같다. "Dieses Grundgesetz gilt zunächst im Gebiete der Länder Baden, Bayern, Bremen, Groß-Berlin, Hamburg, Hessen, Niedersach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chleswig-Holstein, Württemberg-Baden und Württemberg-Hohenzollern. In anderen Teilen

내걸었다. 기본법 23조는 동독이 서독 연방에 편입함에 따라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Nie wieder Sozialismus 사회주의와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동독 사민당 SPD는 기본법 146조에 따라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동서독 통일을 완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사민당의 선거 구호는 '미래의 새 이름 사민당'이었다.¹²⁾

이에 비해 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민사당 PDS은 동독과 서독이 일대일 국가 간 연합체를 맺자고 주장했고 서독의 녹색당의 지원을 받던 동맹 90은 단계적 통일론을 주장했다.

선거결과 동독 주민들은 독일연합에 48%, 사민당에 21.9%, 민사당에 16.4% 그리고 동맹 90 Buendnis 90에는 불과 2.9%의 표를 선사해 서독연방에의 편입을 통한 통일과 사회주의와의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며 통일의 불을 지폈다.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에 출마한 독일연합의 선거 포스터에서 기민련이 중심이 된 독일연합은 통일부정론자들에게 기회를 주지말자는 구호와 함께 '사회주의여 안녕 Nie wieder Sozialismus'을 전면에 내세워 압승을 거뒀다.

Deutschlands ist es nach deren Beitritt in Kraft zu setzen." "기본법의 효력의 범위는 우선 바덴, 바이에른, 브레멘, 베를린,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드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드-팔츠, 쉘레스비히-홀슈타인, 뷔르템베르크-바덴, 뷔르템베르크-호엔졸른 주이며 독일에 속한 다른 부분(동독)은 기본법 유효범위에 편입됨에 따라 확장된다." 동독 인민의회는 1990년 8월 동독은 기본법 23조에 따라 서독 연방에 편입할 것을 결의했다.

12) 서독의 기본법은 통일과 관련해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기본법 23조는 연방의 확대조항으로 동독의 경우 서독연방에 편입됨으로써 통일이 완성된다는 규정이며 146조는 통일헌법을 제정해 법적인 틀을 만들어 통일을 추진하자는 내용이었다.

<표 1> 정당별 득표 결과

정 당	득 표 율	의 석 수
CDU	40.8	163
SPD	21.9	88
PDS	16.4	66
DSU	6.3	25
BFD	5.3	21
Buendnis 90	2.9	12
DBD	2.2	9
Gruene/UFV	2.0	8
DA	0.9	4
NDPD	0.4	2
DFD	0.3	1
AVL	0.2	1
기타	0.4	0

출처: 독일 내무부

(3) 민주 내각 구성

선거결과 주도권을 장악한 독일연합의 기민련 CDU(득표율 40.8%)는 로타 드메지어(Lothar de Maiziere)를 중심으로 사민당 SPD(득표율 21.9%)과 자유민주연대 BFD(득표율 5.3%) 등을 묶어 대연정을 구성하는데 성공했다. 동독 의회는 기민련의 총재였던 드메지어를 찬성 265표, 반대 108표로 총리로 선출했다. 부총리 겸 대변인에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¹³⁾이 임명되었다.

새로 구성된 내각과 의회는 서독과의 통일을 전제로 중요한 현안들을 서둘러 처리했다. 1990년 6월 17일 서독과의 화폐, 경제, 사회통합을 위한 협약을

13) 메르켈은 통일 후 2000년 4월 10일 기민련 CDU의 총재가 되었고 2005년 11월 22일에 연방총리로 선출되었다. 메르켈 총리는 2009년 재선에 성공해 7년째 연방총리로 재임 중이다.

체결했다. 21일에는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Stasi)의 해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에 요하임 가우크(Joachim Gauck)¹⁴⁾를 임명했다. 그리고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은 1990년 10월 3일자로 서독 연방에 편입할 것을 결의하고 6개월의 임무를 마감했다.

1990년 10월 2일 통일 전야제에서 드메지어 총리는 “이별은 슬픔을 의미하지만 동독과의 이별은 기쁨이요 희망”이라는 마지막 연설을 하고 임기를 끝냈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상임지휘자이자 월요데모의 주역이었던 쿠르트 마주어(Kurt Masur)는 베토벤 9번 교향곡 환희를 연주했다.

마. 선거결과 분석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동독인의 통일열망이다. 동독인들이 서독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체제를 동경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통한 즉각적인 통일을 원했다는 점은 다소 의외였다.

동독 기민련 (Ost-CDU)은 서독 기민련과 동일한 기초 하에서 서독 연방체제로의 편입이라는 서독 주도의 통일을 주장했던 반면 사민당 SPD는 일대일로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따라 통일을 완성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선거결과는 동독 기민련과 독사련 등 독일연합이 과반수에 가까운 표를 획득했다. 결과적으로 동독 주민들은 통일에 소극적이었던 사민당에 등을 돌렸다.

둘째,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다. 통일에 대하여 야당인 사민당 SPD의 소극적인 입장과 달리 기민련 CDU의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통일을 강력히 밀어부쳤다. 패전 후 연합국과 유럽 주변국들의 견제로 분단을 당연히 수용해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콜 총리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여러 기관의 설

14) 1940년 동독 로슈톡(Rostock)에서 태어난 가우크 목사는 통일 후 슈타지 문서관리청(일명 가우크 청)의 청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 3월 10일부터 독일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문조사에 따르면 서독주민의 통일 인식은 분단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분단 직후 96%에 달했던 통일 염원은 1987년에는 80%로 줄었다. 또한 통일에 대한 현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분단 초기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던 반면 80년대 후반에는 불과 3%로 감소했다.¹⁵⁾ 이것은 당시 서독인들은 통일을 염원하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콜 총리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통일을 현실 가능한 일로 만들어 갔다. 전통 우방이었던 미국과 공조체제를 적극 활용했다. 동독 급변 사태에 대해 일일이 조지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갔다. 부시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르바초프를 설득했다. 수차례 모스크바를 방문해 고르바초프와 회담을 갖고 반독일 정서를 잠재웠다. 소련의 경제개혁을 위해 대략 600억 달러를 지원할 것도 약속했다.

콜 총리의 강력한 외교력에 힘입어 독일은 주권을 되찾았다. 미국과 소련이 독일 문제에 대해 민족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영국의 대처 총리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도 콜 총리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¹⁶⁾ 하지만 무엇보다 콜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과 외교적 역량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헝가리의 국경개방이었다.

또한 통일에 다소 불안감을 보였던 서독 국민들을 설득했으며 동독 주민들에게는 통일된 독일의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미래를 약속했다.

15)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Die Teilung Deutschlands 1955 bis zur Einheit,"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233* (4. Quartal 1991), p. 28.

16) 독일 통일에 대해 영국의 반발은 거셌다.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콜 총리와의 회담에서 독일민족의 자율적인 결정에 동의한다고 하자 대처 총리는 모스크바로 날아가 강력히 반대했다.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은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오히려 동독 사통당이 승리하기를 내심 바랐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2. 독일통일 과정에서 정당의 정치적 변혁 사례

가. 서독 정당의 활동

통일 전 서독의 대표적인 정당은 기독교통합당 CDU/CSU, 사민당 SPD, 녹색당 Gruene과 자민련 FDP이었다. 기사련 CSU는 기민련 CDU의 자매당으로 바이에른 주에서만 기독교통합당을 대표하고 있는 정당이다.

탈동독 사태가 이어지고 동독에 급변사태가 일어나자 가장 먼저 동독에 개입한 정당은 당시 여당이었던 기독교통합당이었다. 기독교통합당은 동독 주민들의 통일 요구 'Wir sind ein Volk !'를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나갔다. 서독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통일을 추진하며 대외적으로도 강력하게 독일의 의지를 관철해나갔다.

서독 기민련 CDU은 동독 위성정당 동독기민련 Ost-CDU을 지원해 공산당 SED의 영향권 하에서 탈퇴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해 당시 야당이었던 사민당 SPD은 동독 변화에 수동적이었으며 통일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민당은 기본법 146조에 따라 즉각적인 통일이 아니라 서독과 동독이 합의 하에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에 따라 단계별로 통일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독 연방하원(Bundestag)은 격론을 통해 기본법 23조를 근거로한 통일안을 통과시켰다.¹⁷⁾ 통일문제를 선점하고 동독의 급변상황을 주도적으로 리드해온 기독교통합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된 것이다. 선거결과 사민당은 여당이 주도하는 독일연합의 1/2도 못 미치는 득표율(21.9%)을 기록했다.

17) 헬무트 콜 총리는 23조를 근거로 한 통일을 “Koenigsweg 황제의 길”로 표현했다.

나. 동독 정당의 변화

동독 내 정당 체제는 공산당(SED)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위성정당이 포진해 있었다. 이런 전통적인 정당의 모습은 1989년 급변사태가 발발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며 반공과 자유를 표방한 다양한 목소리의 군소 정당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독의 변화를 이끌었던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눈에 띈다.

(1) 공산당 SED와 위성정당

종전 후 동독에 주둔한 소련군정은 1945년 6월 10일 '명령 2호'에서 동독 내 반파쇼 민주정당 설립을 허가했다.¹⁸⁾ 이 명령에 근거해 전후 최초의 동독 정당인 독일공산당 KPD이 태동되었다(1945.6.11). 이어 사민당 SPD(6월 15일), 기민련 CDU(6월 26일) 및 자민당 LDP이 창당되었다.

공산당 KPD은 1918년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브크네히트에 의해 설립되어 1933년 히틀러에 의해 해체된 바 있다. 공산당 KPD은 소련군정과의 상부상조하며 동독 사회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 공산당 지도부는 소련의 지시사항은 무조건 수용했고 소련군정은 재야 정당활동을 탄압했다. 소련군정은 친소련 요원들을 당의 요직에 앉히는 등 동독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당시 비교적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던 동독 사민당 SPD은 소련 군정의 은밀한 탄압을 받으며 1946년 4월 베를린에서 공산당 KPD과 합당하게 되었다. 당명은 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 SED으로 공산당 KPD 60만 명 당원과 사민당 SPD 당원 68만 명으로 구성된 정당이었다. 1948년에는 당원 200만 명을 넘어서는 최대 정당이 되었다. 초기 공산당 SED은 마르크스주의를 표방

18) Hermann Weber, *DDR Grundriss der Geschichte 1945-1990* (Hannover 1991).

하고 레닌주의를 거부하며 소련 식 정치모델을 지향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 있어서 공산당은 소련군정의 꼭두각시로 그 힘을 빌어서 행정, 경찰, 경제 및 언론에 당의 주요 인사들을 심어놓았다.

동독 정당은 명목상으로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듯 했다. 공산당 SED 외에 기민련 CDU, 민주농민당 DBD, 자유민주당 LDPD과 국가민주당 NDPD 등이 있었으나 모든 정당이 공산당 SED의 위성정당이였다. 공산당 SED은 당원만 230만 명에 달했고 위성정당은 50여만 명의 당원을 갖고 있었다.

또한 동독 공산당 SED은 위성정당 외에 산하 외곽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유일무이한 권력을 막강하게 행사했다. 대표적인 외곽단체는 동독 최대 노동자동맹인 자유독일노련 FDGB, 청년동맹 FDJ, 민주여성동맹 DFD 및 문화연맹 Kulturbund 등이다. 외곽단체들은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수백만 노동자, 청년, 여성들을 공산당 조직에 흡수하였다.

이런 막강한 공산 독재체제가 80년대 후반 밑으로부터의 압력을 받으며 서서히 와해되었다. 라이프치히 월요데모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1989년 11월 4일 동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는 20만 명의 군중이 운집해 반공산당 투쟁을 이어갔다. 시민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던 호네커의 계획도 무산되었고 11월 9일을 기해 베를린 장벽이 해체되고 말았다.

(2) 공산당 SED의 몰락과 변신

이런 가운데 1989년 11월 13일 소집된 인민회의는 최초로 비밀투표로 의장을 선출하였다. 민주농민당 총재 귄터 말로이다(Guenter Maleuda)가 신임 의장으로 선출되고 드레스덴 사회주의통일당 SED 지부 대표 한스 모드로브(Hans Modrow)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신임 모드로브 총리는 내각 성명을 발표하고 획기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또한 서독과 조약공동체를 위한 회담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통일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89년 12월 1일 인민회의는 헌법에서 위임한 사통당 정권을 소멸시켰다.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성명에서는 1968년 프라하의 봄을 무력진압하는데 인민군대가 참가한 것을 사과했다. 당원들의 압력 하에 에곤 크렌츠를 중심으로 사통당 정치국의 내각 전원이 사퇴했다. 12월 8, 9일에 열린 임시전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대표단이 과거 스탈린 정권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당명을 “민주사회주의당” SED-PDS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변호사였던 그레고르 기지가 신임 당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에리히 호네커, 에리히 밀케, 빌리 슈토프와 몇몇 동독 정치인들은 동독 검찰청에 의해 직권남용과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공산당 SED이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레고르 기지(Gregor Gysi)는 특유의 언변으로 궤멸 직전의 공산당을 살려냈다. 그는 새로운 얼굴을 가진 공산당을 역설하며 사통당 SED를 SED-PDS로 변경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고 최초의 자유선거에는 민사당 PDS로 출마하는 이변을 연출하는데 성공했다.

(3) 동독 기민련(Ost-CDU)의 변화

1989년 11월 9일 동서를 가르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하루아침에 무력화된 장벽은 동독 주민들에게 혁명과 같았고 시민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주민들의 구호는 보다 진보적이었다. 사회주의 틀 속에서 민주주의적 정치, 슈타지의 해체, 여행의 자유 등을 요구했던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포기를 선언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하고 서독과의 통일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런 급변 상황 속에서 동독 기민련 Ost-CDU의 변신도 빨랐다.¹⁹⁾ 1945년

19) 동독 기민련(Ost-CDU)은 1945년 소련 군정 하에서 창당되었다. 초기 정당의 활동과 목표는 서독 기민련의 자매당으로서 자유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두었다. 이로 인해 사사건건 소련 군정과 갈등을 빚었다. 결정적으로 소련과 충돌한 것은 토지개혁

창당된 이후 줄곧 공산당 SED의 위성정당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기민련이 1989년 12월 15일 이틀간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기존의 공산당과 결별을 선언했다. 서독 기민련과 동일하게 시장경제와 국가의 통일을 정당의 목표로 정했다. 이러한 새 목표로 동독 기민련은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40.8%의 득표율로 400석 중 163석을 차지하는 제1당이 되었던 것이다.

이후 동독 기민련은 서독 기민련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통일의 과정을 강력히 추진하게 된다. 우선 1990년 7월 1일 화폐, 경제, 사회 통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통일에 앞서 경제통합을 이루었다. 동서독 간 화폐통합은 결정하기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다. 실질적인 화폐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1:1 통합을 추진했다는 비판과 함께 독일통일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동독 주민을 위한 정치적 고려는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²⁰⁾

1990년 8월 31일에는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을 마련해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열었다. 통일조약²¹⁾은 초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989년에서 90년에 이르는 통일과정에서 이루어낸 가장 성공적인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²²⁾ 통일조약이 체결되기까지 동독 기민련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동독 기민련의 업적은 서독 체제로의 편입이라는 통일에 대한 구 공산 엘리트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며 서독과의 통일협상을 지원한 것이다.

혁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당시 당 지도부는 토지개혁 명령에 불복하였고 소련은 안드레아스 헤르메스(Andreas Hermes) 총재를 사퇴시켰다. 이후 동독 기민련은 공산당 SED의 위성정당으로 정당의 이념이나 목표가 동일했다.

20) 박상봉, 『남북경제통합론』 (서울: 자유기업원 & 나남 2004), p. 80-83; 박상봉, “독일의 통일비용 분석과 남북통일의 방향,”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70-73.

21) 통일조약이라는 용어는 동독 공산세력들이 서독 체제를 수용하는 전제 하에 통일을 추진하는 드메지어 정권을 적극 방해하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선택한 것임.

22) 토마스 드메지어 독일 연방내무장관은 지난 2010년 통일 20주년을 맞아 통일조약이야말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침반과 닻의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Der Vertrag war und ist zugleich Anker und Kompass für den Einigungsprozess in Deutschland.” *Die Welt*, 1. September 2010.

(4)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동독 공산당의 영향력이 급락하자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뉴포럼 Neues Forum,²³⁾ 민주주의 지금 Demokratie Jetzt, 민주붕기 Demokratischer Aufbruch, 사민당 SPD 등 새로운 정치집단이 생겨났으며 공산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동독 기민련 CDU, 민주농민당 DBD, 자민당 LDPD와 국가민주당 NDPD에도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서독 정당의 개입이 본격화되며 과거의 '민족전선'에서 탈퇴했다. 서독 사민당은 1989년 10월 7일 동독 사민당을 지원해 창당토록 하고 11월에는 녹색당이 창당되었다.

민주주의 지금 Demokratie Jetzt는 동독 새로운 민주주의 개혁과 “우리 일은 우리가”라는 주민의 정치참여를 부르짖으며 1989년 9월 12일 설립되었다. 민주주의 지금은 사통당, 교회, 시민운동, 위성정당 등이 참여하는 '4자회의 (Vierseitiger Tisch)'를 열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이것이 후에 '원탁회의 (Runder Tisch)'로 발전했다. 사통당 SED의 주도적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동독 헌법 1조를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 2달 만에 7만5천명의 서명을 모았다. 민주주의 지금은 1990년 1월 정치 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3월 18일 자유선거에 동맹 90의 일원으로 출마했다.

민주붕기 Demokratischer Aufbruch는 1989년 10월 급변기에 재야 정치 단체로 출범했다. 12월에는 라이프치히에서 창당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고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초대 총재에는 변호사 출신의 볼프강 슈누어(Wolfgang Schnur)가 선출되었다. 민주붕기는 라이프치히 프로그램에서 시장경제를 추구하며 사회주의 노선과 완전히 결별하였으며 통일을 정당의 목표로 내세웠다.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하지 못했던 리더들이 떠나고 반공 개혁주의자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이 대변인, 오스발트 부츠케(Oswald Wutzke)가

23) 뉴포럼(Neues Forum)은 동독 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교회 밖 최초의 재야운동이다. 1989년 9월 19일 Neues Forum은 내무성에 정치단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동독 호네커 정권은 '반국가단체'라는 이유를 들어 수용하지 않았다.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민주봉기는 1990년 3월 18일 인민의회 선거에서 독일연합 Allianz fuer Deutschland에 기민련 CDU, 독일사회연맹 Deutsche Soziale Union과 연합해 출마했다. 선거결과는 독일연합에 공동 참여한 기민련(40.8%)이나 독일사회연맹(6.3%)에 비해 저조한 득표율인 0.9%를 기록했다.

동독 급변기에 조직된 시민운동 중 가장 두드러진 단체는 뉴포럼(Neues Forum)이었다. 뉴포럼은 '항아리를 넘치게 한 마지막 물한방울(Tropfen, der das Fass zum Ueberlaufen brachte)'이라는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89년 동독 민주화운동의 절정으로 공산당을 몰락시키는데 최후의 일격을 가한 반체제 모임이었다. 니콜라이 교회와 겿세마네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기도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이 교회로부터 시작된 운동이라고 한다면 뉴포럼은 교회 밖에서 시작된 최초의 전국 규모의 민주화 운동이었다.

뉴포럼은 동독의 전환기인 89년 9월 9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성됐다. 결성식은 동독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이자 1982년 타계한 화학자 로베르트 하페만(Robert Havemann)이 최후까지 살았던 그린하이데 소재 자택에서 개최되었다. 결성식은 참가자들이 '봉기 89(Aufbruch 89)'²⁴⁾ 선언을 채택하고 공동 서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모임은 결성 초기부터 당과 슈타지의 표적이 되었고 모든 과정이 9월 9일자 슈타지 보고문서에 자세히 기록되었다. 이 기록에는 당시 창설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함께 참석자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었다.

평화주의자이자 반체제 인사였던 베어벨 블라이(Baerbel Bohley), 엔즈 라이히(Jens Reich) 등 반체제 인사들이 참가했던 이 모임에는 슈타지의 감시가 뒤따랐고 참가자들은 블랙리스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현장에 가담했다. 이들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그리고 폴란드 솔리

24) 봉기 89는 국가(Staat)와 사회(Gesellschaft) 사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탈출하는 상황에서 동독 헌법 29조에 따라 대중의 정치적 이해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권리를 찾고자 시민들이 일어서야 한다고 선언.

다르노스크와 같은 개혁 및 시민운동에 크게 고무되었다. 이 후 뉴포럼 초기 참가자들의 집에는 연일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더 많은 체제비판 세력과 민주화 세력들을 응집해냈다. 30명의 창립 발기인들의 집에는 연일 동참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창립 선언 '봉기 89(Aufbruch 89)'에는 2달 만에 20만 명이 서명하게 되었다. 이 중 1만여 명은 정회원이 되었다. 창립 선언에는 국가와 사회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주의를 개혁하고 이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모두가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슈타지의 조직적인 방해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고 탄압과 독재정치에 침묵을 강요당했던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이로부터 뉴포럼은 반세기 누적된 동독사회의 모순과 불만들의 성토장이었고 표현, 집회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창설 후 열흘째인 1989년 9월 19일, 뉴포럼은 정치단체로의 승인신청을 냈고 당시 행정당국은 이 단체가 반국가적이고 불법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다. 시위가 지속됐고 모든 시민운동단체와 재야세력들로부터 뉴포럼은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결국 정치단체로서의 승인을 얻었다.

뉴포럼은 다른 민주단체들과 함께 10월 3일에는 '원탁회의'를 구성해 호네커 이후 에곤 크렌츠와 한스 모드르프로 이어지는 정계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무엇보다도 뉴포럼의 가장 큰 업적은 호네커에서 모드르브 총리에 이르는 공산당의 승계를 부인하고 1990년 3월 8일 동독 땅에 최초로 자유 민주 선거를 실시토록 한데 있다. 이 선거로 동독 내 공산당은 종말을 고했고 동독 기민당의 로타 드메지어가 최초의 합법적인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서독의 콜 총리는 드메지어와 함께 동서독 통일협상을 진행해 숙원인 통일을 이루어냈다.

서독, 프랑스, 영국 등 서방세계의 주요 방송매체들은 뉴포럼의 '봉기 89'를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고 동독의 체제전환의 과정을 심도있게 추적했다. 이런 격변기 속에서 태동한 뉴포럼 및 시민단체와 정당들의 초기 활동은

순수한 사회주의 개혁 운동이었으며 통일이나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과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운동이 활성화되고 반세기 억눌렸던 분노가 드러나며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서독과의 통일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다. 통일 후 정치상황

(1) 정계개편

1945년 소련 군정 하에서 창당된 동독 기민련(Ost-CDU)은 몇 차례 갈등을 빚었으나 소련과 공산당의 탄압으로 의회민주주의 노선을 중단하고 서독 기민련과의 공조를 단절해야 했다. 이후 동독 급변사태가 발발할 때까지 공산당 SED의 위성정당으로 성실히 임했다.

1989년 공산당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자유선거에서 1당의 지위를 획득한 동독 기민련은 통일 직전인 1990년 10월 1일 자매당인 서독 기민련과 통합을 결정했다. 동독 기민련 총재 로타 드메지어는 통합 기민련의 제1부총재가 되었다. 또한 사민당은 1990년 1월 13일 동독 사민당이 생긴지 3개월 만에 통합되었다.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독의 정당체제는 분단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고 1980년대 이전까지 기독교통합당(CDU/CSU), 사민당(SPD)과 자민당(FDP)의 3당 체제를 지속해왔다. 1980년대에 비로소 녹색당(Gruene)이 제4당으로 연방하원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런 안정된 4당 체제는 통일과 함께 여러 변화를 겪게 되었다.

첫째, 80%에 육박하던 양대 정당 기독교통합당(CDU/CSU)과 사민당(SPD)의 퇴보이다. 통일 전 서독 정치체제는 두 정당 기독교통합당과 사민당이 정권을 주고 받으며 안정적인 양당체제를 운영해왔다. 3당인 자민당은 선거결과에 따라 양대 정당 사이를 오가며 연정에 참여해왔다. 물론 1980년대 후반에는 녹색당이 자민당과 제3당의 지위를 겨루는 양상이었다.²⁵⁾

이런 안정적인 정계의 판도는 통일 후 변화를 거듭해 2012년 현재 양대 정당의 지지율은 과반수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또한 통일 후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에 가장 친숙한 자민당 FDP의 3당 회복이다. 통일 전 녹색당에게 3당의 지위를 내준 자민당이 녹색당은 물론 좌파당을 누르고 두 자리 득표율을 기록하며 3당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둘째, 민사당(PDS)의 존속이다. 민사당은 1990년 3월 최초의 동독 자유선거에서 16.4%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민사당은 동독 사통당(SED)의 후신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통당은 1989년 여름 230여만 명에 달했던 당원이 연말에는 20만 명으로 급락했던 독재정당이다. 이렇듯 시민혁명을 통해 완전히 와해되었던 사통당이 민주주의의 얼굴을 내세워 민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통일 후에도 소멸하지 않고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이 밖에 뉴포럼은 다른 개혁 및 민주세력들과 '동맹 90 (Buendnis 90)'을 결성해 정치활동을 본격화했으며 서독의 녹색당(Gruene)과 함께 1998년 사민당 슈뢰더 정부에 연정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동맹 90과 녹색당은 2009년 연방선거에서 10.7%를 얻어 622석 중에 68석을 확보했다.

<그림 1> 2009년 17대 연방의회(Bundestag) 의석수



25) 2009년 17대 선거에서 자민당이 14.6%를 얻어 10.7%를 득표한 녹색당과 11.9%를 얻은 좌파당을 제치고 제3당을 탈환했다. Der Bundeswahlleiter, *Pressemitteilung 14. Oktober 2009*.

(2) Die Linke(좌파당)의 약진과 의미

좌파당(Die Linke)은 동독 사통당 SED의 후신인 민사당(PDS)과 사민당 내 극좌세력인 노동과 사회정의당(WASG)이 연합해 만든 당이다. 2012년 현재 좌파당(Die Linke)은 (FDP)에 이어 연방하원 4당의 지위를 얻었다.²⁶⁾ 더욱이 좌파당은 동독 지역에서 주정부에 연정으로 참여하고 있는 등 5개주 중 4개 주에서 제2당이 되었다.

이런 좌파당의 기적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의 합류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 후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동독인들에게 '동독 향수(Ostnostalgie)'를 자극하는 득표전략이다.

라퐁텐은 통일 전 자아란트(Saarland) 주 총리였으며 전통적으로 사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그는 1990년 12월 2일 통일 이후 최초로 치러진 연방선거에서 사민당의 총리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결과 기민련의 승리로 헬무트 콜 연방총리가 선출되었다. 라퐁텐은 1995년 사민당 총재로 통일 독일의 야당을 진두지휘했다. 1998년 연방선거에서는 사민당을 승리로 이끌어 게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eder) 연방총리를 통일 8년만에 탄생시켰다. 라퐁텐은 슈뢰더 정부 하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라퐁텐은 1999년 3월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합으로 추진하던 노동정책에 반기를 들고 하원의원직을 포함한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 2005년에는 라퐁텐을 중심으로 한 사민당 내 극좌세력이 탈당해서 '노동과 사회정의당 Wahlalternative Arbeit & soziale Gerechtigkeit' (WASG)²⁷⁾을 창당했다. 그리고 2005년 6월 동독 사통당의 후신인 민사당 PDS과 합당해 좌파당(Die

26) 2009년 선거에서 민사당은 득표율 11.9%를 얻어 제4당이 되었다.

27) WASG는 사단법인체로 2004년 바이에른 주 노동조합과 서독의 북부와 서부지역의 정치대안세력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2005년 처음으로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의회 선거에 참여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추구하는 정책보다 더욱 진보적인 색깔을 띠고 있다.

Linke)을 창당하고 2009년까지 원내대표로 당을 이끌었다. 이후 오스카 라퐁텐은 좌파당의 총재가 되어 동독의 지역당에 빠져있던 민사당 PDS을 전국정당으로 키웠다.

라퐁텐의 합류로 전국정당이 된 좌파당은 2005년 선거에서 8.7%, 2009년에는 11.9%를 얻어 녹색당을 제치고 기민련, 사민당, 자민당에 이어 제4당이 되었다.

<표 2> 통일독일의 연방의회(Bundestag) 득표율(2005, 2009)

정 당	2005	2009
CDU/CSU	35.2%	33.8
SPD	34.2	23.0
FDP	9.8	14.6
DIE LINKE	8.7	11.9
Gruene	8.1	10.7
기타	3.9	6.0

더욱이 주 차원에서의 좌파당의 영향력은 가히 혁명적이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²⁸⁾ 작센(Sachsen),²⁹⁾ 작센안할트(Sachsen-Anhalt),³⁰⁾ 튀링겐(Thuringen),³¹⁾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Mecklenburg-Vorpommern)³²⁾ 등

28) 2009년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 결과 사민당 33.0%, 좌파당 27.2%, 기민련 19.8%, 자민당 7.3%, 녹색당 5.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독일 양대 정당의 신화가 깨지고 좌파당이 제2당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29) 2009년 작센 주의회 선거 득표율은 기민련 40.2%, 좌파당 20.6%, 사민당 10.4%, 자민당 10.0%, 녹색당 6.4%, 민족민주당 NDP 5.6% 등이다. 양대 정당이었던 사민당이 좌파당에 밀려 3당이 된 것과 극우파 민족민주당의 원내진출이 특징적이다. 서독에서 1964년 창당된 민족민주당은 나치의 전통을 이어받은 극우세력으로 그동안 미미한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통일 후 동독 지역(메클렌부르크, 작센)에서 세를 불리고 있다.

30) 2011년 주의회 선거에서 기민련 32.5%, 좌파당 23.7%, 사민당 21.5%, 녹색당 7.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자민당과 민족민주당의 원내 진출이 무산됐다.

31) 튀링겐 주의 2009년 주의회 선거결과는 기민련 31.2%, 좌파당 27.4%, 사민당

동독 5개주에서 좌파당(Die Linke)은 제2당 또는 제3당의 지위로 올라섰다. 좌파당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 의회 선거에서만 제3당이고 나머지 4개주에서는 지지율 20%를 넘어서서 2위를 확보하고 있다.

좌파당의 선거전략은 통일 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동독 주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한편 서독 주민들에게는 통일 후 기독교통합당의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표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좌파당의 약진은 과거 공산당이었던 이유로 백안시했던 풍조를 바꿔놓았다. 이미 동독 브란덴부르크 주는 역사상 최초로 사민당과 좌파당이 연정을 구성해 주 정부를 이끌고 있다.

2012년 들어 이런 좌파당의 신화가 서독에서 서서히 깨져가고 있다. 여러 설문조사 결과 지지율이 원내진출 제한선인 득표율 5%를 겨우 넘기는 정도다. 2009년 주 선거에서 서독 10개주 가운데 7개주에서 원내에 진출해 있었던 좌파당이 2012년 5월에 치러진 노드라인-베스트팔렌³³⁾과 쉘레스비히-홀슈타인³⁴⁾ 주의회 선거에서 득표율 5%를 확보하지 못해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좌파당의 미래는 그동안 서독 내 지지기반을 이끌었던 라퐁텐의 건강과 무관하지 않다. 통일 후 좌파당이 일정 비율의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은 라퐁텐

18.5%, 자민당 7.6%, 녹색당 6.2%이다. 기민련과 사민당의 대연정으로 연합정부가 구성되었다.

32)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2011년 주의회 선거 득표율은 다음과 같다. 사민당 35.6%, 기민련 23.0%, 좌파당 18.4%, 녹색당 8.7%, 민족민주당 NDP 6.0%.

33) 2012년 5월 13일에 있었던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 의회 선거에서 좌파당은 2.5%의 득표율을 기록해 원내진출에 실패했다. 2년전에는 5.6%의 득표율로 원내에 진출한 바 있다. 올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민련의 몰락이다. 원내 제1당이었던 기민련은 불과 26.3%의 득표율로 39.1%를 얻은 사민당에 비해 12.8%나 적었다. 이 선거결과는 기민련이 창당된 1947년 이래 얻은 가장 최악의 득표율이다.

34)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2009년 의회선거에서 좌파당을 원내로 불러들였다. 득표율 0.8%로 당의 존재 여부도 불투명했던 좌파당이 2009년의 주의회 선거에서 무려 6.0%를 얻어 원내에 진출한 것이다. 하지만 2012년 선거에서는 2.2%의 득표율을 기록해 원내 진출이 무산되었다.

의 합류로 인한 것이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사민당에 실망한 세력과 노동조합이 라퐁텐을 지지하며 민사당(PDS)과 합당을 통해 좌파당(Die Linke)을 창당하고 서독 내 지지세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68세인 라퐁텐은 2010년 암 선고를 받고 당 총재는 물론 연방하원 원내대표를 포기해야 했다. 이후 당 내 갈등이 고조되고 급기야는 당의 동서 지역 갈등으로 점화되고 있다. 갈등의 쟁점은 연정에 참여해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통 야당으로 남아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이 결과 지도부가 이원화되고 있다. 서독을 중심으로 클라우스 에른스트(Klaus Ernst)와 동독의 게지네 뢰추(Gesine Loetzsch)가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좌파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당의 동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리더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이 역할을 감당해온 라퐁텐의 재기 여부에도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 통일한국에 주는 시사점

독일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일관되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독일과 같은 통일을 포기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독일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확대 보도했던 언론과 소위 통일 전문가들의 정보력의 한계에 기인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독일은 통일 후 여러 부작용과 혼란을 서서히 극복했고 통일 22주년을 맞은 통일독일의 모습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유럽 최강의 나라로 우뚝 서게 되었다. 독일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었다. 통일비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고 분단비용, 통일편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독일과 통일여건이 다르고 경제적 역량이 왜소하다는 통일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독일통일을 적극 연구하고 분석하는 일이 왕성해지고 있다.

독일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선물이다. 독일이 통일되고 많은 비용이 들고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헬무트 콜 총리는 국민들을 향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역사적으로 통일의 전례가 있었다면 나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 국민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백했다.

우리에게는 이 역사적 전례가 독일이다. 통일에 자신감을 되찾고 독일의 시행착오를 분석하고 대비한다면 통일로 인한 부작용과 혼란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회피해서도 회피할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기왕 감당해야할 과제라면 통일의 긍정적인 면을 확대하고 자신감을 갖는 일이 시급하다. 서독이 통일의 기회를 미루었다면 오늘의 강력한 독일의 모습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독일 통일의 전례 특히 동독 급변상황 속에서 시민운동의 태동과 정당화 과정은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북한 내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활발했던 동독 사회의 시민운동은 급변기에 국정의 방향을 이끌었다. 민주주의로의 개혁과 서독과의 통일이라는 방향을 목표로 주민들의 의지를 결집시켰다.

북한도 머지않은 시기에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해야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한도 동독이 걸었던 전철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독에 비해 폐쇄적이었던 북한에 시민운동을 주도할 정치적 그룹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운동의 방향을 이끌어야할 시민단체의 결성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북한에서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싹이자 공산독재 권력을 평화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체다. 따라서 남한의 시민단체나 정치적 그룹들이 개

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는 배급제가 중단된 이후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다. 장마당은 생필품에 이어 각종 정보들이 유통되는 장소이다. 상인들은 과거와 같이 당과 군부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다. 금력으로 상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다. 이런 상인들의 출현은 시민단체 형성에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국내에 정착한 2만6천여 명의 탈북자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탈북자들은 이미 남한 사회에 거주하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체험한 일꾼들이다. 북한 혼란기 탈북자들이 귀향해 자발적으로 시민운동을 주도할 역량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탈북자들이야말로 북한체제의 모순을 현실감 있게 지적하고 통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를 목표로 탈북자들을 위한 리더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둘째, 북한 공산핵심세력들과 남한 중북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해야 한다. 독일 좌파당에서 보듯이 북한 공산세력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남한 내 중북세력이나 진보정당과의 협력이 가능하다. 이미 진보신당이나 통합진보당은 남한 내 체제 불만세력들을 규합해 원내에 진출해 있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된다면 한국도 적지 않는 혼란과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 분명하다. 통일 후 남북 간의 갈등은 현재 남한 사회 내에서 보이고 있는 갈등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공산세력의 재기를 위한 틈새가 될 것이다. 적어도 이 세력들이 통일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도세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권력에 눈이 멀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통일된 한국의 체제를 만드는 일에는 냉철한 판단과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 체제 내에서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으로 북한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는 자세가 요구된다.

III.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의 남북한 정당구조

본 연구는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정치 갈등구조와 정당정치에 대한 개연성을 분석해 본다. 먼저, 분단구조 하의 남북한 정치역학을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해 본 후, 해방 직후 분단구조 형성 시기에 일어난 남북한 정치 갈등구조를 살펴보고 통일과정 및 분단구조해체 시기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분단고착기의 남북한 정당정치구조를 분석하여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의 정치통합 과정에 어떻게 투사될 지를 연구해 본다. 본 연구는 또한 모델분석의 일환으로 독일과 예멘 통일 시기 정치갈등과 정당구조가 한반도 통일에 시사하는 바를 분석해 보고 마지막으로 통일과정의 정치갈등과 정당정치의 역학관계에 대한 개연성을 분석해 본다.

1. 남북한 정당제도의 변천과 현황

가. 이론적 배경: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분단구조 하의 정치구조

분단구조를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적대적인 두개의 근대국가가 대립관계를 이룬 가운데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은 반공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자국의 국민들을 정치사회화시키며 정통성을 확립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정치지도자들은 일종의 전방위 균형 전략(omni-balancing)으로 국내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외세와 동맹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정치적 힘의 균형(political balancing)을 이루어 왔다. 자유주의 시각은 적대적 이데올로기로 인한 체제 간 대립으로 분단구조를 정의할 수 있으며, 냉전 이후에도 이데올로기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위 두 가지 이론의 문제점은 분단구조를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남북 상호간 위협의 근원이 무

엇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실주의의 경우 왜 남북 간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냉전기 미국과 중국이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적대적 관계를 넘어 국교 정상화를 통해 양국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구조적 관계, 즉 분단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유주의 시각의 문제점은 공산주의의 모순이 증명된 이상 북한 역시 체제 변화가 일어나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얀마의 개혁·개방을 보면 변화를 통한 정통성 강화라는 정치지도자들의 인식이 주요했다. 북한의 경우 개혁·개방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은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생존이다. 그러나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시각은 생존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분단이 남북한 정치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본 논고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이론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구성주의 시각에서 분단구조 하의 남북관계와 정치구조에 대해서 분석해본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남북문제를 접근하면 분단구조는 남북이 통일된 근대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상호 적대적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면서 분단된 근대 민족국가들 형성하는 과정에서 고착되어 왔다. 즉, 종족 동질성(ethnic homogeneity)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체제를 지닌 두 개의 근대 민족국가들 간의 대립이 분단구조의 핵심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구성주의는 왜 같은 민족(종족)간에 화해를 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한민족(the Korean nation)이라는 종족 민족주의(ethno-nationalism) 혹은 전근대적 민족주의(pre-modern nationalism)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 두 개의 적대적 근대 민족국가들 간의 대립관계를 구조화시켰는가? 분단구조가 남북한 정치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메카니즘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제기는 통

일과정과 통일 후 통일한국의 정치구조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문제다. 왜냐하면, 분단은 통일민족국가 설립의 미완성을 의미하며 통일은 하나의 근대 민족국가 설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한민족이라는 전근대적 민족(종족)이 근대 민족정체성(modern national identity)을 어떻게 규정해 가면서 통일국가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다. 따라서 분단구조 하에 남북한 정치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변화해가면서 남북한 각각의 근대 민족정체성을 규정해왔고, 통일과정 즉 분단의 해체 속에서 한민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민족정체성을 규정해 갈 것인가가 통일과정 및 통일 후 한반도 정치구조와 정당구조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당정치 구조를 연구할 때 정치사회 갈등구조는 필수적이다. 근대 정치체제 안에서는 계층, 계급, 이념, 종교, 종족간의 갈등구조가 정당정치 구조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분단 이후 북한은 주로 계급 갈등이 근본적인 정당구조를 규정하면서 계파간 갈등이 정치갈등의 주를 이루었고 유일체제 성립 이후에 정치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남한의 경우 지역갈등이 주를 이루면서 1987년 민주화 이전에는 반공세력과 민주화세력 간의 이념적 갈등이 정치구조를 규정했다. 그 이후에는 계층, 세대, 이념 등이 정치구조와 정당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기존 패러다임에서 통일과정과 통일 후 한반도의 정치 갈등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일정한 제약성을 지닌다. 분단의 해체 과정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의 해체는 분단구조가 만들어 놓은 정치구조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정치갈등과 정당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분단구조가 생산한 정치구조와 그 변화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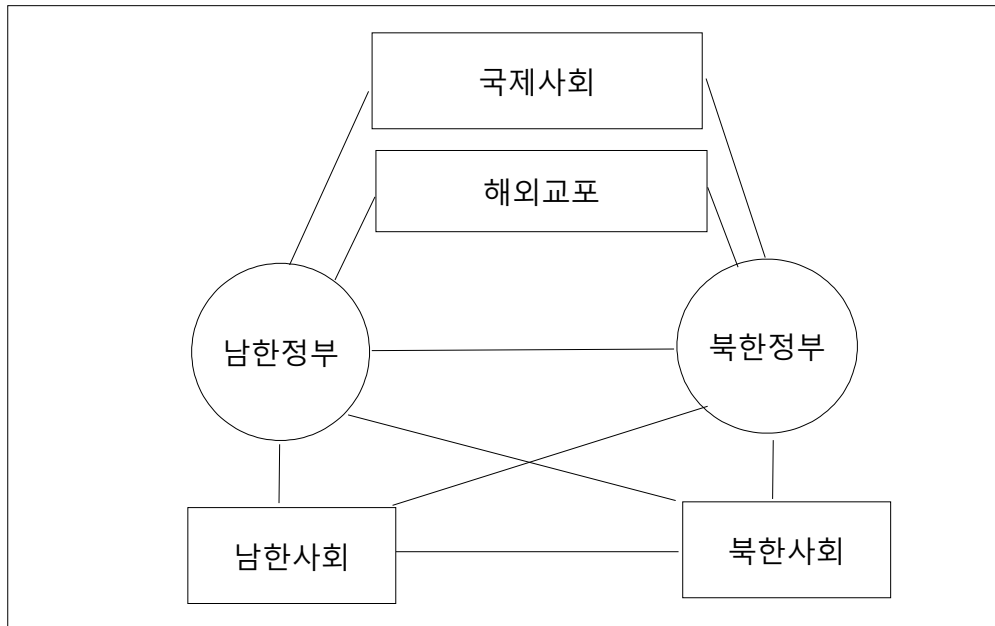
구성주의는 정치공동체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동일화(identification)'와 그 정치체제의 정통성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투사되면서 국가 간 관계를 규정하는가를 분석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남북 간의 분단구조가 남북 정치체제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각각의 체제정체성이 분단구조를 어떻게

강화해 왔는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만들어 준다. 분단구조가 화해와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없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적대적인 두 근대정치체제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단일민족국가 설립에 실패한 후 종족동질성에 근거하여 통일은 민족규범화 되어왔다. '적' 이면서도 '형제'라는 남북이 지니고 있는 이중적이고 모호한(ambivalent) 민족정체성이 하나는 적대적 갈등과 대립 또 하나는 통합이라는 행위 규범을 강요하면서 분단구조는 고착화되어 온 것이다. 분단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남북은 각각 자신만이 한민족을 대표한다는 배타적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근대 국가 설립과정에서 형성된 각자의 체제 정체성을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투사하여 통일을 이루려는 패권통일(hegemonic unification)을 지향했다.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자신의 체제를 강요하는 패권통일은 정복을 의미한다. 남북 간 패권통일 추구는 남북 엘리트 계층에 본질적인 위협요인을 구성하면서 분단구조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해 왔다. 따라서 분단구조의 문제는 패권통일과 화해가 딜레마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통일이 민족의 미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된 남한 체제하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패권통일을 추구할수록 남북화해를 통한 통일을 이룰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통일의 역설적인 측면이 여기에 있다

분단구조 하에서 남북관계는 <그림 2>와 같이 남북 국가 간, 국가와 상대방 국민 간, 국가와 자국의 국민 간, 국가와 해외교포 그리고 국가와 국제사회 간의 다섯 가지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로 구성되어 왔다. 남북 정권은 자기식의 패권통일을 이루기 위해 이 다섯 가지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지배전략(domination strategy)을 취해왔다. 한국전쟁은 국가 간 수준에서 패권통일을 위한 지배전략이 폭력적 수단을 동반한 극단적인 경우이다. 전쟁 이후에도 남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미국 혹은 소련이 세운 괴뢰 정부로 그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각자의 국민과 상대방의 국민에게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해왔다. 또한 통일 공방을 통해 자신의 통일 정책이 정당하고 진정한 통

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정책을 분단주의로 그 정당성을 부정했다. 해외교포사회에 대해서도 각자의 배타적 정통성을 투사하려 하였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자신의 배타적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외교전을 벌였다. 1992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표면적인 외교전은 끝이 났지만, 한반도 주요 이해관련국들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에 대해 완벽한 교차승인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도 남북한은 자신만이 유일하게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치체제이며 따라서 통일 역시 자신의 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배타적 민족대표성(exclusive right to represent the Korean nation)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³⁵⁾

<그림 2> 분단구조하의 사회적 관계 정치동기화 메카니즘



35) Yong Shik Choo, "Dilemma between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the Roh Tae Woo Administration's Engagement Policy," Ph. D. dissert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2002).

배타적 정통성을 둘러싼 대립과정 속에서 남북한 각각의 정치구조는 우선 내부의 이념적, 정치적 갈등을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억압 정치는 통일이라는 명분과 남북 간 상호위협이라는 안보딜레마 속에 남북 국민들의 자국의 정권에 대한 수동적 동일화(passive identification)를 이끌어냈다.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소련의 비호를 받은 김일성이 타정파들을 숙청 내지 흡수하면서 1946년 토지개혁을 기화로 공산혁명을 전면적으로 단행했다. 한국전 직후에는 남로당파, 갑산파 등을 비롯한 라이벌 정파를 숙청하면서 1970년대 초 김일성 유일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한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국가이념으로 일원적인 정치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반미, 공산통일을 내세우며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근대 민족국가를 형성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은 체제 위기 속에 선군정치를 주창하며, 핵주권을 추구하면서 버티기 전략으로 생존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체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공통된 인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 분단구조를 해체시킬 정도로 북한정권의 정통성이 약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남한의 경우 반공 대 민주화의 대립이 약 40여 년간 지속되었고, 반공주의의 지배하에 다양한 이념적 갈등은 잠식되었다. 1980년 후반 민주화와 냉전의 종식으로 남한 내 이념적 논의와 통일에 대한 담론이 확대되면서 남한의 정치갈등의 구조는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계층, 세대, 이념 등 다양한 갈등구조가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계급 정당은 출현하지 않았다. 또한 종교가 정당의 기반이 되지도 않았다. 기독교민주당, 사회민주당, 기독교사회당, 카톨릭보수당 등과 같이 이념, 계급, 종교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정당도 아니다. 따라서 지역이 주요 정당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세대간, 계층 간, 이념간의 갈등이 정당 간 역학 관계를 좌우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이념은 분단구조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갈등구조다. 군부독재시대부터 이어져 온 수구보수 반공세력과 보수민주화 세력에서 파생된 뉴라이트 그룹은 남한의 배타적 대표성을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반공, 강경정책을 통한 남한

식 흡수통일을 주장한다. 좌파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대표되는 진보 세력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화해 정책으로 점진적인 합의 통일을 이룰 것을 주장한다.³⁶⁾ 반면 민노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급진좌파는 북한의 유일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중복적인 대북정책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반공을 국가 이념으로 근대국가를 형성하면서 민주화로 다원적 정치체제를 구축하였으나, 북한·통일문제 등 민족문제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은 남한 정치구조의 가장 근본적인 갈등구조로 남아 있다.

나. 해방 이후 분단구조 형성기의 남북한 정치구조

해방 이후 남북한의 정치 갈등구조와 정당구조는 분단구조의ダイナ미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해방직후 북한에는 조만식이 이끄는 민족주의 세력, 현준혁, 박헌영 등 국내 공산주의 세력, 중국공산당과 함께 항일투쟁을 한 김두봉 등 연안파, 허가이 중심의 소련파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파 등의 정치세력이 존재하였다. 조만식은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발족 당시 조만식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남한을 포함시킨 하나의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소련군의 진주로 이는 무산되었다. 1945년 8월 평양에 진주한 소련은 분단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해갔고, 그 중 하나로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한 평남 건준을 평남 인민정치위원회로 개칭하고 공산주의 인사를 참여시켰다. 또한 소련군은 친소적 정치 대리인으로 극동군 산하 88 특별여단 소속의 김일성을 선정하였다. 1945년 10월 북한 국가조직의 모태가 된 북조선 5도 임시인민위원회(북조선 5도 행정국)가 설립되었고, 10월 13일에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결성되었다. 1945년 11월 조만식이 창당한 조선민주당이 지방에 지부를 세워 당원 수가 급증하고, 중국 공산당이 지지하

36) 임혁백, 『대전 2012: 어떤 리더십이 선택될 것인가?』 (서울: 인텔리겐찌야, 2012), pp. 19-22.

는 연안파 지도자가 귀국하자 북한내 정치갈등은 고조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무력행사는 김일성과 빨치산파만이 가능하였다. 연안파는 입북시 소련군에 의해 무장해제를 당했고, 소련파와 국내파는 무장력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김일성과 빨치산파는 1948년 조선인민군이 창설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당시 민족보위상과 인민군 총사령관 등 군의 요직을 독점하였다. 당시 북조선 5도 행정국의 위원장이던 조만식은 가장 높은 대중적 지지를 받았으나 신탁통치에 반대하여 1946년 1월 소련군에 의해 감금조치 되었다. 따라서 김일성의 정치적 영향력은 넓어지게 되었고,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갔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실시된 두 차례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유엔은 1947년 11월 14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고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였다. 김일성은 소비에트식 국가체제 수립을 위한 개혁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단독정부수립 준비를 서둘러 진행하였다. 1946년 11월 소련군은 북한의 각 도, 시, 군에, 1947년 2월에는 면, 리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였다. 1947년 2월 20일에는 북조선 인민회의를 통해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북조선 인민회의는 1948년 4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채택하였고 1948년 8월 25일 제1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김두봉을 위원장으로 하는 49명의 헌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헌법위원회는 9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공표하였고 내각을 비롯한 정치조직 설립을 완수하였다. 1948년 9월 9일에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49년 6월 24일 남로당과 북로당 제1차 전원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합당을 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이 창당되었고, 위원장에 김일성이 선출되었다.

한국전쟁은 북한 내부 내에 정파갈등을 증폭시켰다. 1950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제2기 3차 전원회의는 전쟁의 책임문제를 놓고 김일성과 박헌영이 대립하였으며 정파 간 정쟁의 서막이 되었다. 소련파는 남로당계와 정치적 연

대를 강화하여 김일성과 대립하였으며, 계파 간 정쟁은 전쟁 초 남로당계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으로 나타났다. 1953년 휴전 직후에는 남로당계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전쟁 후 정쟁은 국가발전전략, 특히 공업발전전략을 둘러싼 이론적 논쟁으로 표면화되었다. 중공업 위주의 경제발전을 주장하는 김일성과에 대해 소련파와 연안파가 정면으로 대응하였다. 김일성은 1956년 8월 중파사건을 계기로 반대파를 숙청하고 중공업 우선의 발전전략을 관철시켰으며, 12월 북한경제의 자립을 표방하고 자력갱생노선을 추진하였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은 노동당 선전선동담당간부들 앞에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하는데 대하여”란 연설을 통해 주체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196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가 주체사상을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채택함으로써 김일성 유일체제의 사상적 기반이 확립되었다. 70년대 유일체제가 구축된 이후 김일성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함으로써 부자세습체제가 확립되었다.

한편, 해방 직후 남한에서는 해외파와 국내파가 혼재하면서 좌파와 우파 간 이념대립이 중첩되는 복잡한 정치갈등 구조가 나타나고 있었다. 미군의 남한 진주와 동시에 우익진영의 한국국민당(백남훈, 윤보선), 고려민주당(원세훈), 조선민족당(김병로, 백관수), 국민대회준비회(송진우, 서상일)는 1949년 9월 송진우, 김성수가 주도한 한국민주당으로 통합하면서 우익진영의 단합을 이루었다.³⁷⁾ 주로 호남의 지주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수정당으로 동아일보가 기관지 역할을 함으로써 그 지지기반을 빠르게 확산시켜 나갔다. 또한 유학파로 민주주의 이념 및 근대적 정당이념을 도입하였다. 한민당은 좌익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 타도를 선언하고 영수에 이승만, 김구 등 7인을 추대하면서 중경임시정부 지지를 선언하였으나, 이후 이승만을 지지하는 단정 세력으로 변화해 간다.³⁸⁾

37) 한태수, 『한국정당사』 (서울: 신태양사, 1961), pp. 63-64.

38) 김학준, "해방후 한국 정당변천사연구," 『국사관논총』, 제25집 (1991), pp. 248-249.

좌파진영은 해방 직후 1945년 8월 15일 여운형이 발족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박헌영의 조선공산당(1945년 8월 재건됨), 김두봉의 독립연맹(1942년 7월 10일 결성)이 개칭된 조선신민당(1946년 2월)으로 분파되어 있었다. 건준이 좌경화 되어감에 따라 안재홍 등은 조선국민당을 창당하여 중도우파 진영을 구축한다. 반면,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을 설립하게 된다. 건준은 치안기관, 인공은 정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건준의 주도권이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자에게 넘어가면서 여운형은 인공을 이탈하여 조선인민당을 조직했다. 여운형의 주도로 인민당, 공산당, 신민당간의 좌익 통합이 시도되나 이념적 갈등으로 공산당의 추진과, 인민당 47파(좌파), 신민당 중앙파가 합당한 조선노동당 계열과 공산당 대외파, 인민당의 31파(우파), 신민당의 반간부파가 여운형을 중심으로 합당한 사회노동당으로 분리되었다. 신민당은 1947년 7월 북조선공산당과 합당, 8월 북조선노동당을 창당했다. 조선노동당은 11월 조선인민당과 남조선노동당을 창당했다. 1948년 8월 남북 노동당은 연합위원회를 형성하고 1949년 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되어 현재까지 북한의 유일정당으로 남게 된다. 사노당은 북조선노동당의 남로당 지원으로 해체되고 다시 여운형 추종세력을 중심으로 근로인민당을 결성하게 된다.³⁹⁾

좌익분열은 우선 내부 이념적 갈등에 기인했다. 중도 좌익인 인민당은 사회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성격으로 인해 공산주의와 단절할 수밖에 없었다. 인민당은 계획경제수립을 주장하면서도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하되 “국영 혹은 농민에게 적절한 분배”를 한다는 비공산주의적 사회주의, 비자본주의적 집단주의 노선을 내세웠다.⁴⁰⁾ 남한의 공산주의자의 경우 초기 장안파 공산당이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 정치지도부의 비호 하에 있었던 박헌

39) 김남식, 『남로당 연구』 (서울: 돌베개, 1984), pp. 247-272.

40) 김학준, "해방후 한국 정당변천사연구," p. 250; Ho-min Yang, "Interplay of Nationalism and Socialism in Korea," eds. by Chong-shik Chung & Jae-bong Ro, Nationalism in Korea (Research Center for Peace & Unification, 1979), p. 73.

영의 '콤-그룹'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으로 통합되면서 중도좌익과의 이념적 괴리는 더 커졌다.

해외파의 귀국은 남한의 정국을 한층 더 혼란으로 몰아갔다. 통일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내는데 실패한 해외파는 국내 정치세력과 연합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 하였고, 이에 대해 국내 정치세력은 국내 지지기반을 제공해 주고,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좌우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다. 상해임시정부의 좌우합작 노력은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창조파와 개조파로 결렬되면서 실패하였다. 그 후 임정은 김구의 애국단을 중심으로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좌우합작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⁴¹⁾ 해방직후 임정 인사들은 더욱 분열되어 갔다. 김원봉, 성주식, 장건상, 김성숙 등은 좌익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에 참여하였고, 김원봉, 성주식은 민족혁명당을 재결성하였으며 부주석이었던 김규식은 임정세력이 중심이 된 반탁운동이 아니라 좌우합작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민족자주연맹⁴²⁾을 창설한다. 신익희, 이범석, 이시영 등은 이승만의 단정론에 동조하게 된다. 또한, 변혁을 주장했던 김구의 한독당은 우익정당으로 변모하게 된다. 하지만 한민당과 친일문제를 놓고 불화함으로써 한독당은 국내에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고 만다.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친일파 처리 문제로 좌파와 대립하면서 한민당과 이범석 등 임정이탈파, 외국유학파들과 함께 보수진영을 구축했다. 반면 김구의 한독당은 임정의 법통문제를 놓고 건준과 대립함으로써 좌익과의 협력이 어려워졌고, 국내 정치 기반 부족으로 이념적으로 경직됨으로써 미군정 및 한민당과도 갈등을 빚게 된다.⁴³⁾

41) 백기완, "김구의 사상과 행동의 재조명,"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1979), p. 281.

42)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중심으로 중도파 정당 및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것으로 이후 단정수립에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추진한다(안철현, "해방 직후 남한의 정치세력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주의의 시각에서"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논문, 1984), p. 69.

국내 정치세력이 좌우합작에 실패하고 임시정부가 통합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한은 미군정 지지 하에 반공주의에 입각한 단정수립을 추진했다. 단정수립 시기 주요 정세세력은 이승만의 독립촉성국민회의, 한민당, 그리고 남로당이였다. 단정수립과 관련해서는 단정파와 남북협상파간에 균열과 갈등이 벌어졌다. 이승만의 독촉과 김구의 탁치반대국민총동원회의가 주가 된 독립촉성국민회는 이승만계, 김구계, 김규식계, 신익회계로 4분되었고, 결국에는 이승만에 의해 주도되면서 김구, 김규식 등의 남북협상파를 용공세력으로 몰아갔다. 한민당 역시 김약수 등 진보파가 탈당하면서 남북협상파를 공격하였다. 협상파인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자주연맹은 좌중우의 연합체였으나 통일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5.10 총선에 불참하여 그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다. 남로당 역시 1946년 후반부터 활동의 제약을 받으면서 폭력투쟁으로 발전하여 대중과 유리되었고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2.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정치 갈등과 정당구조

가. 해방 직후 분단구조형성과정의 통일시기 분단해체과정에 대한 시사점

해방 후 남한 내 정치 갈등구조를 보면 첫째, 민족문제를 둘러싼 갈등, 둘째, 통일문제에 관한 갈등, 셋째, 임정과 국내세력간의 갈등, 넷째, 외세와의 갈등, 다섯째, 근대국가 정체성에 대한 좌우간, 크게는 남북 간 갈등 등 크게 다섯 가지 갈등관계가 나타났다. 분단구조 차원에서 보면 국가와 국제사회간, 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자국의 사회 간, 국가와 상대방 사회 등 네 가지 차원에서 갈등구조가 각각 친일파 처리, 미군정과의 갈등, 한국전쟁, 좌우대

43) 김학준, "해방후 한국 정당변천사연구," p. 251.

립, 단정 대 남북협상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치 갈등구조가 통일과정의 정치구조에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체성에 관한 문제다. 이는 통일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남한식 통일의 경우 북한정권의 접수와 관련된 국가정체성과 북한 정치엘리트에 대한 처리문제다. 둘째, 북한의 반통일론자 문제다. 셋째, 남한 정치세력과 북한 정치, 사회 세력과의 연계문제, 넷째, 미국·중국과의 관계, 다섯째, 남한 내 정체세력들 간의 갈등 문제다. 다시 말하면, 통일의 정당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통일을 둘러싸고 남한 내 정치세력들 간에 어떠한 갈등구조가 형성될 것이며 북한의 정치사회세력과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그리고 북한 내 반통일 세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중국, 미국의 개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통일정국의 정치 갈등구조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분단구조 형성기 정치 갈등구조의 특징과 통일과정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 당위성을 둘러싼 분열이다. 해방 후 단정론이 제시되었을 때 남한에서는 단정파와 남북협상파가 대립했다. 남한 주도식 통일의 경우 남한체제를 북한에 투사하는 것은 북한내 통일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반통일세력 대 반체제 통일세력간의 갈등, 그리고 그 중간 형태로 찬통일 점진적 개혁파와 점진적 체제전환파의 출현 가능성이 있다. 통일은 불가피하나 정치 세력들의 생존을 위한 전략의 한 형태로 중도파가 출현할 수 있다. 이들은 통일파와는 달리 남한과의 급진적 정치통합을 반대한다. 통일과정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북한의 수구세력이 몰락하고 있거나, 했다는 점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창기에는 반통일세력의 저항이 강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중도파 대 통일파간의 갈등구조로 변화될 공산이 높다. 통일문제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갈등이다. 반통일세력은 체제유지를 주장할 것이 자명하다. 반면 중도파는 “1국가, 2체제” 내지 북한의 상당한 자율성을 주장하

면서 점진적 통일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과의 경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병합을 주장하는 급진적 정치통합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통일 국가의 정체성 문제는 북한 엘리트그룹 처리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는 부분으로 이와 관련한 정치적 갈등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해방 후 국가정체성을 놓고 좌파가 공산주의와 중도좌파(사회주의)로, 통일문제로 우파가 단정파와 남북협상파로 분할되고, 친일파 척결문제 등 민족문제로 인해 좌우대립과 우파 내 갈등이 일어난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갈등구조는 외세와의 연계이다.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냐에 따라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국내 정치집단들의 외세와의 연계가 다른 양상을 띠고 나타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남한식 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분명하나, 한반도 안정과 전쟁재발을 위해 과연 전면적인 흡수통일이나, 아니면 점진적인 연합을 통한 통합이나에 대한 손익계산을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치 내지 대립을 피하기 위해 북한을 일종의 '완충지'화 하는 것이 기존의 대북정책임을 고려할 때 남한의 전면적이고 전격적인 흡수통일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전격적인 흡수통일을 추진할 경우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한 개입이 예상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통일과정 혹은 분단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갈등구조에 대한 시나리오는 <표 3>과 같다.

<표 3> 남한식 통일과정에서 형성될 북한 정치 갈등구조에 대한 예측

정파	통일문제	국가정체성	외세연계
반통일수구파	반통일	주체사상	친중
반통일개혁파	반통일	체제개혁	친중
중도보수	찬통일 (점진적 통합)	체제개혁	친중
중도개혁	찬통일 (점진적 통합)	점진적 체제전환	친중/친미
통일파	찬통일 (전격적 병합)	자유민주주의 채택	친미

반통일 수구파는 체제유지와 기득권세력 생존에 그 최우선 목표를 두고 중국과의 연합 하에 통일 및 체제변화에 저항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기득권 세력을 비호할 경우 기득권 세력의 남한식 통일에 대한 저항은 강해질 것이고 정치 갈등은 극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김정은을 비롯한 주도세력과 군부 내 강경파가 반통일 수구파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통일 개혁파는 개혁, 개방을 지향하는 온건정치세력으로 통일이 가져올 체제위협과 개인의 생존 문제로 인해 통일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다. 수구파와 같이 중국과의 연합 하에 저항세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중도보수파는 통일의 불가피성을 직시하고 지향하지만, 북한 리더십의 정통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남한과의 연합을 통한 통합을 추진하는 세력이다. “1국가 2체제”로 북한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으로 연방 형태의 통일을 추진할 공산이 높다. 친중 정책으로 미국과 남한의 영향력을 경계하면서 통합 시 정치적 지분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중도개혁파는 점진적인 통일을 주장하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단순한 개혁·개방이 아닌 점진적 체제전환을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 기본적으로는 친중 정책을 취하되, 미국과의 관계도 넓혀가면서 통합 시 남한정부와 연립 정부 설립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중도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룹은 주로 지식인들로 국제 경험이 많을수록 개혁적 성향을 띠게 될 것이다. 통일파는 북한정체성을 부정하고 남한 패권통일을 지지한다. 남한과의 통일을 우선으로 친미적 외교 노선을 취하는 사실상 반정부 통일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주로 통일 과정에서 혁명적 변화를 주도하는 선도그룹(advance group)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와 급진 지식인들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 분단구조 고착시기의 남한 정치구조가 미치는 영향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치구조를 결정해온 것은 지역, 이념, 계층, 세대다. 특히 지역은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간의 영호남 갈등구조, 노무현 대통령 이후 형성된 PK, 영호남간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려는 충청권 등 대선과 총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온 규정요인이다. 영호남 간의 지역 갈등구조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두고 보수 대 진보의 이념적 갈등구조와 맞물리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책 논쟁의 정치적 갈등구조의 한 축을 이루었다.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지역 갈등구조는 한반도 내의 지역 간 대립을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북한에 우호적인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호남과 북한과의 연계 그리고 대북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영남 보수세력과 대립구조로 발전할 개연성도 있다.

계층 간의 갈등 역시 남한의 정치 갈등구조를 규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2011년 실질임금은 김영삼 정부 당시 5.72% 증가, 김대중 정부 당시 3.53% 증가, 노무현 정부 당시 3.58% 증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0.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더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청년실업자 역시 24만 명에 이르고 있다. 냉전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의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되었다.⁴⁵⁾ 자유무역이 확산되고 자본시장이 개방·확대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 역시 세계화되고 있다. 시장논리와 이윤추구를 통한 자본 축적이 기본 원리인 다국적 기업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으로 부의 집중과 소득의 불균형을 증가시켰다. 한국 역시 신자유주의 영향 하에 시장주의 경제와 효율성 정치를 강조하는 체제로 전환되어 왔다. 부의 집중이 확대되면서

44) 『내일신문』, 2011년 11월 2일.

45)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지수는 197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1980년과 2002년 사이 급속도로 상승하였다: 1820년 0.46, 1980년 0.66, 2002년 0.71 (Milanovic).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2011년 “서울의 가을 사태”로 발전되었다. 2012년 대선주자들 역시 부의 편중을 막고 복지를 개선한다는 “경제민주화”를 최대 선거 이슈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층 간의 갈등은 공동체적인 동양의 전통적 가치관과 공명하면서 통일한국의 정치 갈등구조의 한 축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남한 노동자 계층과 북한 지도층과의 연계가능성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세대 간의 격차 역시 벌어져 왔다. 서태지의 출현으로 문화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대중문화의 헤게모니는 젊은 층으로 옮겨왔다. 더구나 IT 혁명으로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커지고 ‘2040’이라는 젊은 세대가 디지털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였다. 2002년 젊은 SNS로 자신들만의 소통의 공간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며 기동력 있는 신유목적 정치세력을 창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바로 신유목적세력이 창출한 것이다.⁴⁶⁾ 유교적 가부장적 권위주의 체제에 반대하면서 저변 문화를 장악해 온 젊은 세대는 기존 정치에 근본적으로 회의적이다. 2008년에는 미국수입 쇠고기 광우병 문제로 반미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을 주도하였다. 2011년에는 안철수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2012년 대선구도 더 나가서는 한국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소외된 젊은 세대의 정치적 부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브레진스키는 21세기에는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와 다양한 이슈의 부상과 더불어 음지 하에 있었던 세력들의 감성적 표출이 세계정치를 바꾸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⁴⁷⁾ 중동 자스민혁명 역시 IT 혁명세대의 비판적 감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판적 젊은 세대의 부상과 세대갈등은 남북한 통합과정에 있어서 북한체제에 대한 북한 내 비판적 젊은 세대와의 연계를 가져올 수 있어 통일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46) 임혁백, 『대선 2012: 어떤 리더십이 선택될 것인가?』, pp. 24-25.

47) Zbigniew Brezinski,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2)

있다. 그러나 사회 통합에 있어서는 여전히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 이념적 갈등구조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보수와 복지를 강조하는 진보간의 경제관을 둘러싼 갈등구조이다. 2012년에는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복지문제, 경제민주화가 최대의 이슈로 부상되고 있고 보수 역시 차별 규제 등 진보적 이슈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경제 이슈만으로 이념 갈등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한계성을 의미한다. 이념적 갈등의 보다 근본적인 이슈는 대북정책이다.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분단구조 하에 북한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미국에 대한 시각이다. 반미가 민족주의인가? 북한문제에 대한 보수진영의 정책은 북한에 대한 봉쇄와 개입으로 양분되어 있으나, 북한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인정은 하지 않는다는 남한의 배타적 정통성에 그 기저를 두고 있다. 진보의 경우 남한식 통일을 가정하면서도 북한정권을 통일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점이 바로 이념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반미는 진보진영의 존재이유이며 분단 이후 진보적 통일주의와 진보적 민족주의의 핵심을 이루어 왔다. 북한문제를 둘러싼 이념적 갈등구조는 또한 통일한국의 지역적 갈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영남은 보수, 호남은 진보성향으로 갈등구조가 나타나고 있어, 이념적 균열은 지역주의와 중첩되면서 통일한국의 정치 갈등구조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 독일 모델의 시사점

독일의 정당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서유럽 정당들의 특징을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에 따라 정당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크게 사회당, 자유당, 보수당, 신급진우파, 녹색당, 포괄정당 등 5개 정당으로 분리해 볼 수 있다.⁴⁸⁾ 이 5개 정당은 주로 이념과 정책에서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

48) 조민 외, 『남북 통합대비 북한지역 정당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고 있다. 사회당 혹은 사회주의 정당은 빈부의 격차가 주요 관심사이다. 민주주의는 기득권자와 부유한 자들의 편이며, 사회정의와 평등을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자들에게 국가의 시장 개입은 효율적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하는 자유주의와는 달리 시장기능의 결과로 생긴 부의 분배를 국가가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것에 최우선을 둔다. 사회주의자들은 성장의 결실이 너무 사회 내에서 지나치게 불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면 성장이 좋은 것이라는 입장이나, 주요 관심은 국가가 국유화와 같이 직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소득분배를 이룰 수 있는가에 있다.⁴⁹⁾

자유당(liberals)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 개인의 자유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경제면에서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한다. 낙태나 이혼 등과 같은 사회문제도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교회, 노동조합 등을 비롯한 권위조직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입장에서 반대한다. 보수당은 사회권위를 지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권위가 보호해야하며, 따라서 사회권위에 의한 문제해결이 중요하다. 보수주의가 모든 변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급격한 변화를 경계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수당은 자유당과 같이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한다. 그러나 자유시장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위계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빈부의 차는 자연스러운 것이나, 과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⁵⁰⁾ 신급진우파는 신파시스트 정당이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전선, 독일의 공화주의자, 스웨덴의 신민주당, 노르웨이의 진보당,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사회운동과 북부리그 등과 같이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점에서 파

pp. 3-7.

49) 위의 책, pp. 3-4.

50) 조민 외, 『남북 통합대비 북한지역 정당 활성화 방안』, pp. 4-5.

시즘과 다르며, 경제적으로도 파시스트 정당보다 더 많은 자유를 주장한다. 녹색당은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 윤리적인 것, 심미적인 것을 강조한다. GDP 성장보다는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 비핵화, 인권, 성차별 폐지 등을 주요 어젠다로 제시하고 있다. 주로 젊은층, 고학력, 도시 신중산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괄정당은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다양화되자 다양한 이익집단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사회분화와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정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이해와 계급을 지지하는 전략 차원에서 출범한 탈이데올로기 정당이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은 동독의 생명줄이던 외세 소련이 붕괴되면서 외부 충격에 의해 서독으로 흡수되는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통일 전 서독은 의회주의적 연방제를 택했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의 수평적 권력분리에 연방-주-지방자치제로 권력이 수직적으로 분리된 분권형 권력구조다. 연방의회가 정치를 주도하고 연방의회 하원에서 선출되는 수상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인 의원내각제이다. 서독의 선거 제도는 비례대표제와 지역구제가 혼합된 매우 복잡한 선거제도인데 이는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이다. 정치 갈등구조는 이념과 정책에 따라 균열되어 있다. 종교는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 CDU)이 구교, 신교, 보수주의, 자유주의자들을 통합 연합하면서 사실 상 주요 정치갈등 요인으로 부상하지 않게 되었다. 기민당은 아데나워(1949-63) 수상 재임기간 동안 보수층의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며 국민정당으로 발전하였다. 역대 선거에서 35~40% 지지를 확보해왔다. 1982년 재집권하면서 콜 수상의 리더십 하에 동독을 흡수통일하게 된다. 기독교사회연합(기사당: CSU)은 바에른주에 그 지지 기반이 한정된 지역정당이나 기사당은 기민당과 연정을 하였고, 기민당보다 더욱 보수주의이다. 사회민주당(사민당: SPD)은 독일노동자총연맹과 사회민주주의노동당의 정치적 이념을 기반으로 출범한 사회주의당이었으나, 2차대전 이후 마르크스 레닌 사상을 버리고 개혁적인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전

환하였다. 사민당은 독일통일 무렵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통일을 주장하였다.⁵¹⁾ 자유민주당(자민당: FDP)은 1945년 창당되어 신자유주의를 추구해왔다. 기민당과 사민당과 번갈아가면서 연정을 해왔으나, 녹색당의 출현으로 지지 기반이 약화되었다. 녹색당은 사회운동단체가 연합하여 창설하였다. 환경, 비핵화 문제 이외에도 직접민주주의, 사회정의와 성차별 극복, 평화와 인권문제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독일통일 이후 동독의 동맹 90와 연합하여 동맹 90/녹색당으로 재창당하였다.⁵²⁾

<표 4> 서독의 정당구조

	자유당	기민당	녹색당	사민당
이념	신자유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탈근대주의	사회민주주의
주요 이슈	자유시장경제	시장경제, 사회권의, 흡수통일 주도	환경, 성차별, 인권	사회정의, 소득격차감축, 점진적 통일

1945년 소련의 동독 점령 이후 잠정적으로 다수 정당이 출현하였으나, 북한의 경우와 같이 소련의 비호 하에 사회주의통일당(동독 공산당)이 주도하는 일당제로 전락하게 된다. 사회주의통일당의 일당독재 하에 기독교민주연합 (동독 기민당), 독일자유민주당, 독일민주농민당, 독일국가민주당은 위성정당화 되었다.⁵³⁾

51) 위의 책, pp. 15-16.

52) 위의 책, p. 16.

53) Alexander Thumfat 저·안미현 외 역, 『동·서독의 정치통합』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225-228.

<표 5> 분단 후 동독 정당 지지 기반

	사회주의 통일당	기독교 민주연합	독일자유 민주당	독일민주 농민당	독일국가 민주당
지지 기반	공산주의, 소련	기독교단체, 기능인 자영업자	기업인, 지주 등	농업협동 조합원	전직 직업군인, 전직 나치당원과 교사

1948년 아테나위 수상은 서독의 배타적 정통성을 기반으로 서독이 독일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독일 민족을 대표한다는 할슈타인(Hallstein) 정책을 선포하고 동독과의 수교국들과 외교를 단절하였다. 동독의 울브리히트 서기장은 친소련 정책을 근간으로 1민족 2국가의 국가연합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받으려 했다. 동서독은 정치적 외교적 대립 속에서도 경제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서독은 동서교류를 독일 내 특수관계로, 동독은 국제관계로 규정하려 했다.⁵⁴⁾ 1969년 사민당의 브란트 수상이 취임한 후 서독은 동방정책으로 전환하였다.⁵⁵⁾ 1970년 2회에 걸친 정상회담으로 '기본합의서'가 동서독 간에 체결되었다. 1973년 양국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1974년 상호 대표부를 본과 베를린에 설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갔다. 1982년 출범한 기민당의 콜 수상 역시 동방정책을 계승하였다. 1980년대 서독의 대기업이 동독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1986년 동서독 간 문화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자르루이스시와 아이젠헤텐슈타트시 사이에 협력관계가 체결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다.⁵⁶⁾

54)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pp. 87-125.

55) 이영기,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 (서울: 형상사, 1990), pp. 15-39.

56) 통일대비특별정책연수단, 『독일통합실태연구』 (서울: 통일원, 1992), p. 48.

<표 6> 동방정책

시기	내용
1955년 9월	할슈타인 정책 발표
1969년 10월	브란트의 동방정책
1970년 3월	1차 동서독 정상회담
1970년 5월	2차 동서독 정상회담
1970년 8월	유럽의 현 국경선 인정 및 무력사용 포기에 관한 독·소 조약
1970년 12월	'오데르 나이세(Oder-Neisse) 국경선 인정 및 무력사용 포기에 관한 독·폴란드 조약'
1971년 9월	'베를린에 관한 4대국 협정'
1972년 12월	동서독 기본조약
1973년 9월	동서독 유엔동시가입

독일 통일은 동서독이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소련과 공산권 붕괴로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1989년 동독에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뉴포럼(New Forum)'이 결성되어 개혁운동을 주도하였고, '동독사회민주당(SDP)'이 발족하여 '민주적 사회주의' 수립을 위한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동독은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을 요구하면서, 동독의 지도자들은 정권유지를 포기하였고, 소련군의 지휘 하에 있었던 동독 군들의 개혁세력에 대한 무력진압 역시 일어나기 어려웠다. 시민들의 개혁요구가 거세지고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인민의회는 공산당의 정권 독점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정당 및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을 인정하였다.⁵⁷⁾

이에 따라 '뉴포럼', '민주주의 지금',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이니셔티브' 등 반체제운동 단체들이 정당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기민당, 민주노동당, 자민당, 독일국가민주당 등 기존 정당들의 활동이 확대되었다. 민주여성연합, 자

57) 위의 책, pp. 42-44.

유독일청년 등 기존의 사회단체 역시 정당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12월 정당 및 사회단체들 간의 원탁회의가 구성되었다. 한편 동서독 수상은 12월 19일 정상회담을 열고 조약공동체 형성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동독 모드로우 수상은 4단계 국가연합형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높은 기대와 동독 내 급속한 변화로 독일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0년 3월 18일 동독 인민회의 선거를 두고 동독 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단일세력으로 집결할 수 없었다. 분열된 상태에서 동독의 정당/사회단체들은 서독의 정당과 연합을 시도했다.

<표 7> 동서독 정당/사회단체 연합

정당/사회단체 연합체	서독정당/사회단체	동독측 정당/사회단체	1990년 3월 선거결과
독일연합	기민당	민주혁신, 독일사회연합	48.5%
사민당	서독사민당	동독사민당	21.84%
자유연합	서독자민당	동독자민당, 독일국가민주당	5.28%
민주사회당		민주사회당	16.33%

출처: 박성조 · 양성철,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p. 51.

점진적 통일 방안은 급속한 변화와 높은 통일의 열기 속에서 그 타당성을 상실하였다. 3월 선거에서 서독 기민당은 조기통일론을 주장하면서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의 통일을 주장하였다. 사민당은 단계적 통일로 동독의 정치경제체제를 개혁한 이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었으나, 동독주민이 조기 통일을 지지하여 결국 급속히 통일을 추진하게 되었다. 1990년 5월 동서독 정부는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다. 그 이후 동서독 간 정당통합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8월 '독일통일을 위

한 국가조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의 정당통합이 본격화되었다. 다만 민사당은 서독정당과 통합하지 않았다. 즉 독일통일 과정은 분단해체 시 동독의 일당제가 무너지면서 여러 정당들이 출현하였고, 급진, 흡수통일이 추진되는 가운데 서독의 정당으로 통합되었다.

통일 초 총선에서 기민당/기사당, 자민당 연합은 각각 36.7%, 7.1%, 33.5%를 획득해 33.5%를 얻은 사민당을 압도했고, 조기통일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정당통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1989년 10월부터 1990년 4월까지 지속된 동독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었다. 또한 서독정당들이 동독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당통합을 주도하였다.

라. 예멘 통일의 시사점

예멘은 합의통일을 이루었으나 정당분열이 일어난 케이스이다. 1960년 남북으로 분단된 예멘은 국경지대에서 무력충돌을 하면서 남북예멘 간의 적대감이 고조되었다. 1979년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 당시 북예멘 남부지역의 민족민주전선인 좌파 계열을 지원하기 위해 남예멘이 침공하였다. 북부 부족장들의 지원으로 남예멘의 공격을 물리친 살레는 1979년 남북예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982년 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 1985년 석유 발견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민주화를 단행하였고 이슬람 보수세력과 좌파 민주세력의 정치활동을 허용하였다. 1970년 설립된 예멘민주인민공화국은 대통령 평의회를 이끄는 대통령 겸 의장 루바이 알리, 민족전선 서기장 이스마엘, 총리 나셀 등 3인의 과두정치체제를 이루고 있었다.⁵⁸⁾ 3인 모두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하였으나, 알리는 친중국적인 성향을, 이스마엘은 친소련적인 교조주의 성향을, 나셀은 실용주의 성향을 띠었다. 1975년 소련의 남예멘 군기지 설치를 계기

58) John Peterson, "Nation-building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Two Yemens," ed. by Pridham, *Contemporary Yemen: Politics and Historical Background* (Croom Helm, 1984), pp. 94-95.

로 소련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단일정당인 민족전선통합정치조직 내 이스마엘과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1978년 북예멘 가쉬미 대통령 폭사를 계기로 친소파는 알리를 축출하였고, 이스마엘은 예멘사회당을 설립하여 소련식으로 국가조직을 개편하였다. 그러나 북예멘과의 전쟁으로 아랍권의 원조가 끊기고 소련과 동유럽권의 원조 역시 기대에 못 미치자 1980년 나셀의 실용주의 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나셀은 소련과 아랍권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취했다. 그러나 1982년 세계 원유의 하락으로 경제가 침체하자 친소파와 이스마엘은 나셀을 공략하면서 정부요직을 장악했다. 1986년 1월 나셀이 강경파에 충격을 가한 사건을 계기로 군의 지원을 받는 친소강경파와 나셀 간에 내전이 일어났고, 나셀은 북예멘으로 망명하게 된다. 그러나 소련의 개혁·개방 효과가 남예멘까지 미쳐 고르바초프는 남예멘에게 개혁·개방을 촉구하였고, 강경파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졌다.

1986년부터 시작한 남북예멘의 통일 대화는 1988년 초까지 망명자 귀환과 권리보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1988년 3월 국경지대 군사 충돌이 고조되자 남북예멘은 국경지대 비무장지대화화 석유 등 천연자원 공동개발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그해 5월 합의하였다. 특히 1989년부터 모스크바로부터 개혁·개방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자 남예멘은 통일 이외의 해결방안이 없음을 깨닫고 통일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예멘의 경우 합의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 외부로부터의 충격 즉 공산권 몰락과 소련의 압력으로 남예멘이 통일이외의 선택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둘째, 군사적 긴장을 막기 위한 석유 자원 공동개발이라는 상호 호혜적인 교류가 통일의 윤활유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셋째, 남예멘이 수용할 수 있는 정치통합을 북예멘이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북예멘의 살레 대통령은 권력배분문제에 관해 남예멘 측에 과감하게 양보하여 통일정부의 권한을 균등히 나눈다는 제안을 하였다. 남예멘의 국방부, 정보부처, 내무부의 강경파들은 통일에 반대하였으나 대부분의 지도층이 찬성하였다.

<표 8> 예멘통일과정

시기	내용
1986년 7월	남북예멘 지속적인 통일 논의에 합의
1987년 7월	망명자 문제 해결 논의
1987년 11월 - 1988년 2월	전쟁 방지를 위한 남북예멘 각료회담 (4회)
1988년 3월	북예멘 분쟁지역의 비무장지대화와 공동개발 제안
1988년 1월 16일 - 17일	타이즈 실무회담: 남북예멘군대의 중앙검문소설치 및 천연자원공동개발 합의
1988년 5월 3일	사나 정상회담: 국경지대 2200km ² 비무장지대화 및 석유공동개발 합의
1989년 초	고르바초프의 남예멘 개혁·개방 촉구
1989년 7월	남예멘 다당제제도로 전환준비
1989년 11월 29-30일	남북예멘 정상회담: 통일에 대한 원칙적 합의
1990년 1월, 3월	공동각료위원회: 통일의 구체적 방안 협의
1990년 4월 19 - 22일	남북예멘 지도층 시나 회동: 예멘공화국 선포 및 과도기 조직에 관한 합의서 서명
1990년 5월 22일	예멘공화국 선포

1990년 걸프전쟁은 통일예멘의 정치적 갈등을 다시 고조시켰다. 이라크 침공을 비난하고 미국 등 외국군의 개입을 반대하면서 예멘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반감을 사서 대외원조가 중단되었고 실업률이 급증하였다. 1991년 1월 하시드 부족연맹 총수 아흐말이 사우디와 무슬림형제당의 지원으로 이슬람개혁당을 설립하고 반정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슬람개혁당은 이슬람 교리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개혁당의 보수주의자들은 통일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다. 총선 전후로 보수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간의 상호 테러가 지속되었다. 1993년 4월 총선결과 국민회의 85만, 예멘사회당 65만, 이슬람개혁당 50만으로 국민회의와 사회당은 연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후에 개혁

당도 연정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남북예멘 지도층은 권력구조와 정책방향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하였다. 알비드 부통령이 북예멘 출신 아비안주지사를 살레 대통령의 재가없이 남예멘 출신으로 교체하자 살레 대통령은 사회당에 대한 강압정책을 실시하였고, 1993년 4월 남북예멘 군대간 첫 무력충돌로 발전하였다.⁵⁹⁾ 5월 5일 살레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북예멘군을 아덴으로 진격시켜 3주간 내전이 일어났으며, 5월 21일 남예멘 지도층은 예멘민주공화국 창설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7월 7일 북예멘군은 아덴을 함락시키고 남예멘 지도층은 해외로 도피하게 된다. 남북예멘은 합의통일을 이루었으나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력으로 통일을 완수하게 된 것이다.

1994년 9월 선거에서 살레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재선되었고, 사회당은 무장해제 되었다. 또한 개정헌법은 이슬람율법이 모든 법률의 근원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슬람개혁당과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다. 즉 보수주의자와 이슬람근본주의자와의 결탁의 결과였다. 결국 예멘사회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현재 예멘의 정치균열은 이념적인 것이 아닌 종교적 문제로 이슬람 근본주의자로부터의 위협이 정치갈등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예멘통일이 주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흡수통일이 무력통일을 수반할 것이라는 가정을 부정한다. 합의통일이 훨씬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안정된 통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힘의 역학관계를 무시한 대등한 정치통합은 오히려 통일정부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고 내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역시 예멘 통일이 주는 시사점이다. 가장 유의해야 할 문제는 군부에 대한 완전한 장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일정부는 폭력수단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한 간의 통일의 경우 군사력이 예멘보다 훨씬 대규모 병력

59) Baghat Korany, et al.,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the Arab World, Volume 2, Comprehensive Experience*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pp. 256-257.

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군대통합이 추진되지 못하고 정치병합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적 무질서와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⁶⁰⁾

마.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정치 갈등과 정당구조

통일과정은 북한정권의 정통성이 상당히 약화되어 통일이외의 대안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 <그림 2>에서 보면 통일과정은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북한의 배타적 정통성이 부정되고 북한 주민들의 정치동일화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멀어지는 상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정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은 초기 통일의 당위성 논쟁과 통일 방법에 대한 갈등에서 점차적으로 국가정체성에 대한 갈등 혹은 북한 정치세력의 남한체제에 대한 저항 여부와 남북한 이데올로기 연계에 따른 이념갈등, 마지막으로 그와 연관되어 친중대 친미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갈등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이 시사하는 바는 통일방식에 따라 정치 갈등구조가 다르게 나타나고, 정당구조 역시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분단구조 해체과정에서는 통일, 민족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내에 크게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지닌 그룹이 나타날 수 있다. 급진적 흡수통일의 경우 독일은 기민당 등 서독 정당이 동독 정당을 통합하면서 동독의 반통일 세력은 와해되고 점진적 통일을 주장한 동독공산당 온건파가 민주사회당으로 통일정국에 참여하였다. 북한의 경우 북한 주민이 급진적 통일을 원할 경우 반통일 세력이 도태되면서 중도파를 중심으로 북한의 체제개혁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은 남한의 진보세력과, 통일을 통한 북한체제의 전환과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원하는 통일파는 남한 보수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정당통합을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 또한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북한 중도파를 지지하고 통일과정이 길어지게 될수

60) 조민, 『남북 통합대비 북한지역 정당 활성화 방안』, p. 46.

록 남한진보에 대한 북한 중도파의 레버리지가 강화되어 갈 수 있다. 이는 통일과정에서 남한 보수진영과 이데올로기 마찰을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 정당들 간의 연대문제와 중국의 개입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다. 즉, 북한의 중도온건파 - 남한의 진보 - 중국 대 북한의 통일파 - 남한의 보수 - 미국 및 서방 간의 국내 정치세력들과 외세와 연계된 갈등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갈등구조는 특히 북한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남한으로의 정치적 동기화가 강할수록 흡수통일의 속도와 통합성이 높아질 것이다. 만약 남북 간의 이해관계가 차이가 많을 경우 즉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자신들의 독자적 정체성을 주장할 경우 통일과정에서 극한대립의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점진적 통일의 경우는 북한 주민의 급진적 통일에 대한 우려가 높고 북한 체제에 대한 귀속 관성이 아직 상당히 남아있는 상황을 상정한다. 따라서 북한 내 중도파와 통일파간의 갈등구조가 증폭될 것이며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그 갈등구조는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점진적 통일의 경우 중도보수파와 온건파간의 연합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중도파 양진영이 통일우선주의를 지지할 경우 통일파와 반통일파 사이의 협상파로 등장하면서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첫째, 극단적인 통일파와 반통일파를 제외한 범북한 연합을 조직하고 남한과의 통일협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국이 지정학적 안정을 위해 북한의 반통일파와 중도보수파를 지지할 경우 친중적인 반통일 세력과 체제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친중적 중도보수 세력은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할 공산이 높다. 즉 외세와의 연계가 가장 큰 정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도온건파는 통일을 지지하면서 통일파 혹은 급진세력과 반통일/중도보수파 간의 협상을 통한 통일추진을 지지할 것이다. 둘째, 협상을 통한 점진적 통일의 경우 남북 간의 정당통합은 급진적 통일의 경우보다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남북정당 간의

통합이 더디게 이루어지면 질수록 남북 간의 입장 차이는 더 크게 인식될 것이며 예멘의 경우와 같이 남북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더구나 남한의 진보세력에 대한 북한정당의 레버리지가 높아져 통일 이전에 통합의 실패로 통일과정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바.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정당구조

정당구조는 크게 계급정당, 기능정당, 이념정당 구조로 나눌 수 있다. 계급정당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노동자, 중산층 그리고 부유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상호 갈등구조를 형성하면서 정치역할을 이루어간다. 기능정당은 특정 지역이나 그룹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이념정당은 특정 지역, 그룹, 그리고 계급을 초월한 이념간의 갈등 구조를 반영한다. 남한은 지역정당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계급정당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급진좌파 정당도 계급보다는 이념 즉 대북관을 놓고 보수정당과 대립하는 분단이념의 산물이다. 북한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념적으로는 계급정당이나, 그 일원적 성격으로 사실상 사당화 되어왔다. 통일과정에서의 정당구조 형성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다. 남북한 각자 기존의 정당구조가 통일과정에 접어들면서 변화를 겪을 것이다. 그리고 남한 정당들과 연계되면서 그 과정에서 외세와도 연계될 개연성이 높다.

남한에서는 이념과 지역이 결합된 정당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역·이념정당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며 북한문제에 대하여 이념적으로 대립할 것이다. 특히, 북한문제에 대해 수용적이거나 포용적 태도를 보여온 진보는 통일과를 제외한 북한 정당과의 정치적 이해가 맞물리면서 연계 내지 연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수정당은 북한의 통일과와 협력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자 하는 진보세력인 호남과 부

산 지역을 비롯한 기존 노무현 대통령 지지기반이 진보적 통일론을 중심으로 응집할 가능성이 높다. 진보세력의 경우 점진적 합의 통일에 무게를 두면서 북한의 중도파와 연계를 통해 연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한 각 정파들 간의 이해가 잘 조정되면 북한의 이해를 주장하는 정당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남한 진보세력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 더구나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이 북한 정당을 지원할 경우 남한 진보세력에 대해 북한 진보세력이 해계모니를 가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통일은 남한의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정치통합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북한내 반통일파와 중도보수파의 영향력을 주변화시키면서 북한을 대한민국 헌법내로 통합하면서 남북 간의 정당통합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점진적 연합은 예멘의 경우와 같이 남북 간에 정치갈등이 증폭될 수 있고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남북 정치 갈등은 또 다른 분단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내전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현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았을 때 가장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이고 또한 다원민주주의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남북간의 조속한 정당통합으로 기능적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책정당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물론 남한의 지역주의와 북한의 지역주의가 강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정당의 출현 역시 그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그 태생적 기원으로 계급정당의 성격을 지닐 것이다. 계급정당의 출현이 북한 주민을 대변하고 통일문제로 인한 북한내, 남북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치통합이 한반도 차원에서 조속히 이루어질 경우 계급갈등은 정책이념 갈등 속으로 흡수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정당구조는 크게는 보수와 진보의 정책이념을 기본으로, 계급, 지역적 특성을 대변하는 정당 구조를 추구해야 한다. 즉, 통일한국은 남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치균열이 한반도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지역갈등과 계급갈등보다는

정책이념 갈등이 정당구조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구조는 점진적 통일보다는 남북이 '선통일 후통합'을 추진하는 급진 통일 속에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남북간의 '선통일 (특히 정치통합)'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북한에서 통일현상 (북한정권의 정통성의 붕괴와 북한 주민들의 남한으로의 귀속 현상의 강화)이 일어났을 때 남한의 대북한 개입이 국제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의 대북개입의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남북한 모두 유엔가입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남북문제를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민족내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남한의 북한주권 개입은 국제법적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통일은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한민족 당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국제사회 및 동북아 지역에서 확고히 인정되고 규범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의 대북한 개입과도 연결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의 개입여부는 통일과정의 전개와 통일한국의 미래 형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외세의 개입을 최소화 혹은 방지하고 남북간의 조속한 정치통합을 통한 선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북한 옹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명확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3.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과정에서 정치통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정치동기화다. 그리고 정치갈등의 요인 중 가장 주요한 변수는 1) 남북 간의 정당통합과 남남갈등, 2) 외세, 특히 중

국의 개입여부이다. 독일통일에서와 같이 북한 주민의 남한 배타적 정통성에 대한 정치동기화가 강할수록 통일의 속도와 통합의 정도가 커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남북 간의 정당통합 또한 통일의 방법에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다. 특히 북한 중도파와 남한 진보와의 연계는 중국의 개입에 의해 통일의 진행속도가 늦어질수록 남한 진보세력의 레버리지가 약해질 개연성이 높다. 또한 점진적 통일의 경우 남북 간의 입장차이가 인식되면 될수록 북한 정당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 남북한 간의 차이가 부각되면서 통합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남한에 대한 정치동기화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 통일은 난항을 겪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국내정치구조 하에 중국의 개입은 북한의 입장을 강화시키며 예멘과 같이 남북한 통합을 또 다른 분단의 연장선 상에서 새로운 갈등구조를 극복해야하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외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북한 주민의 남한정치체제로의 동기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통합을 통한 통일을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통합과정에서도 독일 통일의 경우와 같이 선 통합 후 이해조정을 통해 남북간의 정치갈등을 먼저 완화시키고 기능적 시각에서 다원주의적 정당구조를 한반도 차원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IV. 북한 지역의 민주화 및 민주적 정당 활동 기반 조성 지원 프로그램

1. 통일전후 북한 지역의 정치적 상황 전망

이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려 한다.

첫째는 이론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고찰이다. 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알 수 있다면 통일 전후 북한 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비교적 개연성 있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정치 체제 변화를 가정한 기초에서 상상할 수 있는 통일 전후의 북한 지역 정치 상황이다. 즉 현행의 일인 유일체제에서 맞을 수 있는 가능성 높은 통일 유형과 집단지도체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가능성 높은 통일 유형, 다당제 하에서 맞을 수 있는 가능성 높은 통일 유형 등을 분석하려 한다. 둘째를 설명하기 위해선 첫 번째의 이론적 통일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통일 전후의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전망하고 민주화 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하기 위해선 북한체제를 정치 체제 변화 과정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구분해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선 몇몇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선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 이론적 통일 시나리오 고찰

이론적 통일 시나리오를 제시한 대표적 연구는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통일연구원, 2002), 「남북한 통일시나리오」(삼성경제연구소, 1996),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국토통

일원, 1989) 「북한정치상황변화 예측연구」(국토통일원, 1989) 등이 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비교적 오래전에 진행됐던 연구이지만 최근엔 이러한 주제의 연구가 거의 없어 참고할 문헌이 많지 않다.

하지만 위의 연구에서도 이론적 틀은 참고할 가치가 있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에서 돌아보면 당시 내렸던 전망이 맞는가를 볼 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다.

실례로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에서 설문에 응한 무려 84%의 전문가들이 “5년 내 북한이 초기 자본주의양식을 도입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매우 높음 13%, 다소 높음 20%, 조금 있음 50.7%)고 답했다. 또 69.4%가 “김정일에게 개혁·개방의지가 있다”(매우 높음 10.1%, 상당히 그렇다 59.1%)고 답했다.⁶¹⁾

설문에 참가한 전문가 69명이 대학 북한학과 교수, 통일연구원 및 통일 교육원 연구진, 국방연구원 북한문제 관련 연구진, 통일부 관련 업무 담당자 등 한국 최고의 대북전문가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론적 통일 시나리오 그 자체를 놓고 볼 때는 현재에도 당시의 분석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돼 온 이론적 통일 유형은 크게 3가지 또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3가지 유형은 평화적 통합(By Peaceful Integration)에 의한 통일, 체제 붕괴 및 흡수(By Default)에 의한 통일, 전쟁(By War)에 의한 통일로 분류할 수 있다.

4가지 유형은 합의형, 유도형, 자멸형, 충돌형으로 나눈다. 하지만 유도형과 자멸형은 붕괴 및 흡수 통일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3가지의 통일 유형에 기초해 고찰하려 한다.

61) 조한범,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29~36 참조.

(1) 평화적 통일

남북이 평화공존을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시점에서 상호 합의와 조화로운 방식으로 두 체제가 점진적이면서 진화적으로 결합한다는 시나리오이다. 일명 '연착륙(Soft Landing)'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이 시나리오는 현재 남북이 다 같이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는 통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속내로 들어가서는 사정이 좀 다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경제난을 겪으며 남북한 경제격차가 급격히 벌어진 이후부터 흡수통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평화적 통일전략 같은 것은 생각할 여력이 없다. 남쪽도 최근 정권들에서 통일 전략보다는 안정적 분단 관리에 치중하려는 경향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평화적인 합의에 의한 통일은 매우 이상적인 설일 뿐 이러한 통일을 유발하는 계기와 시점 등은 거의 전망할 수 없다. 다만 남북한 모두 현 상황 유지를 오랫동안 하면서 평화정착이 이뤄지면 경제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두 체제의 국제적인 공인, 공식적인 평화조약, 제한적 남북 경제교류, 1국가 2체제 통일론에 따른 점진적 구조적 변화, 최종적인 통일 완성의 길을 따라갈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에서 나타난 대표적 통일 사례들을 보면 통일은 평화적 공존에 따른 점진적 결합보다는 냉혹한 힘의 충돌에 따른 결과로 닥쳐왔다. 같은 민족이 분단돼 살다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을 이뤘던 베트남, 독일, 예멘이 바로 그러하다. 베트남의 통일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었고, 독일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된 경우다. 예멘의 경우는 주변국의 중재와 남북예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듯 했지만 결국은 4년 만에 북예멘군이 남예멘의 수도를 점령함으로써 재통일을 이뤘다. 예멘의 통일은 서로 간의 차이와

갈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의통일 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생생히 보여 주는 사례가 됐다. 남북은 위의 세 나라보다 분단 역사로 보나 정치·문화적 차이로 보나 비교할 수 없는 큰 간극이 존재하는 까닭에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 기대할 수 있는 통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2) 붕괴 및 흡수통일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해 붕괴되는 상황에서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급격히 통일이 찾아온다는 시나리오이다. 일명 '경착륙(Hard Landing)'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시나리오는 냉전이 종식되고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진 1980년대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고 현재도 그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대량 탈북으로 북한이 치안유지 능력을 상실하거나 북한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 북한 권력층 암투에 따른 정권 붕괴 가능성 등에 기반하고 있다. 즉 북한 정권이 붕괴하거나 체제 통제 능력을 상실하면 국제 사회가 개입해 질서를 회복하며 이 과정에 남한이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남북통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북한체제가 붕괴될지, 또 붕괴된다고 하면 이후 국제 사회가 어떤 형태로 개입할지,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3) 전쟁에 의한 통일

남북한 군사적 충돌에 따른 결과로 통일이 달성되는 시나리오이다. 이는 남과 북에 엄청난 인명 및 물질적 피해를 초래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장 피해

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950년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켜 남한을 침공해 왔듯이 이 땅에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남북의 경제적 격차나 군사력 격차로 볼 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논리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을 점령할 확률이 극히 낮을뿐더러 설령 북한이 한국을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통치과정에 북한체제가 오히려 남쪽에 흡수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쟁은 긴장이 조성된 시기에 우연한 사건이나 오판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다.

전쟁에 의한 통일은 현재로는 남한 혹은 미국, 중국 등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매우 높다.

나. 정치 체제 변화에 따른 통일 전후 북한의 정치적 상황 및 주민의식 고찰

이 주제에서는 통일 전 북한에 나타날 수 있는 정치체제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려 한다. 첫째, 현재 김정은 정치체제를 1인 독재체제로 규정하고 이러한 1인 독재체제에서 또는 이런 정치 체제가 붕괴되는 시점에서 통일이 이뤄질 경우, 둘째, 북한에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선 상황에서 통일되는 경우, 셋째, 북한에 다당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통일되는 경우로 나누려 한다.

각 유형은 다시 다양한 가설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같은 유형에 속한다 하더라도 통치자나 시기는 달라질 수가 있으며 그에 따라 북한의 민주화 진척 상황도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 1인 독재체제 하의 통일

이 시나리오는 크게 김정은 체제와의 또는 김정은 체제의 붕괴 이후의 통

일을 의미한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는 남북 상호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남북의 인구나 경제격차를 감안할 때 남북통일은 결국은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김정은의 독재체제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은 체제가 성공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해 남북의 경제력이 비슷해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실상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아주 먼 훗날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인 독재체제 하의 통일 가능성을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북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전쟁에 따른 통일, 합의형 평화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대남문제에 있어 전략 전술적으로 1국가 2체제 통일 방안에 동의하고 실행으로 가는 듯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독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내놓고 민주화를 수용한 전례는 거의 없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려 하는 것은 통일로 가는 시나리오가 아닌 통일 전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여러 가설 가운데 김정은 체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다시 아래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가) 시나리오 1- 김정은 체제의 붕괴

김정일 체제 붕괴의 가능성 높은 요인으로는 식량난으로 인한 대량탈북, 경제개혁 와중에 국가적 통제력을 잃고 국가통치체제가 와해되는 경우, 암살에 따른 김정은 체제의 붕괴 등을 들 수 있다. 전쟁과 민중봉기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협동 생산에 기초한 농업방식을 개혁하지 않는 한 풀릴 여지가 전혀 없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들

어서고 7월부터 몇 가지 경제개혁 조치를 선포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수급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6월 3,000원 선에서 오르내리던 식량 가격이 9월 말에 6,200원으로 폭등하기도 했다.⁶²⁾

이는 김일성 사후 대량탈북 사태가 초래되기 전인 1995년 초 상황과 유사하다. 평양시장에서 1995년 당시 2월에 50원을 오르내리던 쌀값이 5월에 120원, 7월에는 200원까지 수직상승했고 그해 봄부터 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아사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2~3년 사이 수십만 명이 중국으로 탈북했다.

현재 북한의 상황도 그와 유사한 바 이를 조속히 진정시키지 못하는 경우 대량 탈북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국경봉쇄와 중국의 탈북자 단속이 비교할 수 없이 강화됐기 때문에 대량탈북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하지만 대량탈북이 벌어진다고 해도 1990년대 중반의 교훈으로 미뤄보아 대량탈북으로 인해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대량탈북 사태가 북한체제의 통제 불능상황과 결합되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경제개혁 와중에 국가 지배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난으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 주민들이 국가의 지시를 듣지 않고 이를 통제해야 할 간부들도 이에 동조해 제 살길만 찾는 상황이다. 일명 전 국가적인 ‘침묵의 태업’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북한체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4중, 5중의 감시와 전근대적인 공포 탄압 하에 익숙된 북한 주민들이 봉기를 일으킬 가능성 보다는 국가의 지시를 어기고 형식적으로 집행하는 척 하는 태업이 현재로는 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에 국가가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김

62) NK지식인연대 홈페이지 10월 11일자 ‘북한 물가 동향’ 참조.

정은 측근에서 암살을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옆 사람에게도 속을 터놓기 힘든 북한체제에선 군 총참모장이라도 1개 소대조차 정치위원이나 보위부 몰래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군부 쿠데타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암살의 경우엔 혼자 또는 몇 명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방지하기 어렵다.

김정은 체제의 붕괴 시 북한 주민들의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민주주의나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도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김정일 체제의 붕괴로 북한이 한국과 통일되는 경우 북한에 민주주의적 선거시스템을 주입하는 일은 비교적 쉽다. 리비아나 이집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독재체제가 붕괴된 나라들은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보편적인 선거방식을 통해 국가권력을 선출한다. 이러한 선거방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정치세력의 저항이 없다면 비교적 손쉽게 한국식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민주적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다.

(나) 시나리오 2- 김정은 체제의 개혁 성공

김정은 체제의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김정은이 1960년대 남한의 박정희식 개발모형을 적극 수용해 경제발전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둬와 동시에 정치적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통일은 요원한 일이 된다. 정치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자신감 넘치는 독재자가 굳이 통일로 자신의 독재적 지위를 위태로운 상태에 빠뜨리려 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북한의 민주화 및 민주적 정당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은 이뤄질 수는 있다. 이에 대해선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려 한다.

(다) 시나리오 3- 김정은 이외의 권력자 등장

장성택과 같은 북한의 실권자가 김정은을 축출하거나 이양 받아 자신이 절대 권력을 틀어쥐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경우라고 해도 통일의 측면에서 고찰할 때 김정은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권력자가 정권을 내놓고 통일을 하려 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 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60년 넘게 김 씨 부자 신격화 교육을 받아온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독재자의 등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독재자가 등장했다고 해서 그 정권이 오래 간다고 볼 수는 없다.

김정은이 자리를 내놓고 새로 등장한 독재자가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의외로 파격적인 정치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미안마의 테인 세인 정권처럼 독재자에게 정권을 물려받았지만 자신은 개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집단지도체제 하에서의 통일

이 시나리오는 김정은 유일 통치체제가 집단지도체제로 바뀐 상황에서의 통일을 의미한다. 당분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 역시 다시 아래와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

(가) 시나리오 1- 김정은 생존 하의 집단지도체제

김정은이 스스로 권력을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향후 북한의 상황에 따라 김정은 생존 하에서도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 경우 김정은은 자신이 태국과 유사하게 왕의 지위에 올라왔고 나라의

통치는 측근들에게 공동 통치 형태로 맡기려 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생존 하의 집단지도체제는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김정은이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주민들의 저항 등에 부닥쳐도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벗어나려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절대 왕권을 가지려 한다고 해도 그가 나라의 통치권을 이양한다고 하면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김정은을 둘러싼 측근들의 파워가 매우 커져서 김정은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단지도체제가 형성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1인 독재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넘어갔다는 것은 북한 정치체제가 한 단계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외부의 민주화 지원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시나리오 2- 김정은 이후의 집단지도체제

김정은 체제의 붕괴가 곧 통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암살 또는 망명의 방법으로 역사무대에서 퇴장하는 경우 통일이 갑자기 닥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북한에 새로운 통치체제가 들어설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때 들어선 통치체제는 김정은처럼 신격화에 기초한 통치권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재보다는 집단지도체제로 갈 확률이 보다 높다.

이 경우 집단지도체제는 중국처럼 노동당 중심의 일당제 집단지도체제를 따라가거나 또는 다당제 도입을 위한 완충기적 성격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집단지도체제에는 어느 정도 특정 개인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견제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화를 위한 과정으로 본다면 후퇴보다는 진보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 또 1인 독재체제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다) 시나리오 3- 중국의 괴뢰정권이 들어서는 경우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붕괴돼 권력 공백이 발생한 경우 중국이 개입해 자신들의 입에 맞는 괴뢰정부를 세우는 경우이다. 이런 정부는 형식상 중국과 비슷한 집단지도체제 형태를 갖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이 독재정부나 남북통일을 적극 추진할 다당제에 기초한 민주정부를 용인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주민들도 남북통일보다 차라리 중국의 괴뢰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실상과 통일 이후에 감내해야 할 경제격차에 따른 소외감, 2등 국민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 등을 더욱 잘 알게 될수록 괴뢰정부를 지지할 확률은 높아진다.

한국과 일본의 정보 당국은 2009년 중국 접경지역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한다. 조사는 중국 조선족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을 면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매번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 설문지 내용은 “북한이 갑자기 붕괴됐을 때 당신은 어느 쪽에 서겠는가”하는 내용인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가장 많은 답은 “중국 쪽에 붙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둘째가 “어떻게든 자력갱생(自力更生)하겠다”는 답이었고 “한국 쪽에 붙겠다”는 답이 세 번째였다고 한다. 그리고 아주 적은 수의 주민이 “유엔 또는 미국의 중재에 따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 정보 당국이 1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1차 조사 결과는 위 답변 순서대로 48%, 30%, 20%, 2%였고 이보다 3개월 앞서 일본 자위대 산하 대(對)북조선정보조사처가 실시한 조사는 39%, 32%, 25%, 4%였다. 또 우리 정보 당국이 10월까지 실시한 2차 조사 결과는 40.1%, 31.5%, 27.1%, 1.2%였다. 북한이 무너지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듯 북한 주민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며 결국 남북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상식적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정보 당국은 이후에도 두세 차례 유사한 조사를 벌였으나 결론은 비슷했다고 한다.⁶³⁾

북한이 중국의 경제권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가는 현 상황은 북한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친밀감을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예속되고, 남쪽보다 더 문화적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매우 경계해야 할 이유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 북한의 민주화는 중국의 민주화 발전 과정에 종속돼 진행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또 통일도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중국의 괴뢰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영구분단은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의 경제력이 한국에 맞먹을 정도로 올라서서 경제적 자생력을 키우게 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시장경제를 습득하고 문화정서상으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춘다면 북한 주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오면 결국은 중국보다는 같은 민족인 한국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민족정서에 기초한 보편적 감정이다. 이를 기초로 볼 때 북한에 집단지도체제가 확립되는 때에는 남쪽이 북쪽 주민들에게 보다 정서적으로 친밀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3) 다당제 하의 통일

북한에 다당제 정치체제가 들어선다는 것은 결국 북한도 민주화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의미한다. 현 상황에서 북한에 다당제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왜냐하면 독재체제의 특성상 김정은이 유일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한 자신의 독재 권력을 허무는 다당제를 용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은이 태국 국왕이나 일본 천황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는데 성공했다면 북한에 형식적인 다당제를 허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경우라도 진정한 다당제

63) 『중앙일보』, 2012년 9월 29일 강영진 칼럼.

가 아닌 노동당 지배하에 소수 정당이 연합하는 구도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 다당제는 가능성을 따져 볼 때 김정은 체제 이후에야 될 수밖에 없다. 즉 북한 권력층 또는 주민들이 포스트 김정은 이후에 남북통일을 선택하지 않고 독립적인 정권을 선택하며 이 정권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겪었던 민주화 발전단계를 스스로 또는 주민들의 압력으로 밟아나가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당제까지 정치체제를 발전시켰다는 것은 남북 사이에 통일이 언제든 지닥쳐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 다당제 정치체제가 들어서면 현재 남북 정권이 지향하는 합의에 기초한 평화통일 역시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한국과 국제사회의 민주화 및 민주적 정당 지원 프로그램이 전성기를 맞게 될 것이다.

북한에 다당제 정치체제가 자리 잡는다면 초기 형태의 정당은 정책이나 이념보다는 지역연고주의에 바탕을 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실패한 사회주의를 추종할 가능성은 전혀 없을 뿐더러 오로지 경제발전을 해야 한다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복지나 성장이나 하면서 정책 이념 공방을 늘어놓는다면 그 정당은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당제 초기에는 북한에서 성장, 다시 말해 '우리도 잘 살아보세'의 구호를 내놓는 정당이 가장 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념적 갈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장에 있어 어떤 지역을 먼저 발전시켜야 하는 지 등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지역주의에 기반해 표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통일 전후라면 북한 내부에서의 지역적 대립 이상으로 남북 사이의 지역적 대립 역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통일 이후 북한의 민주적 정당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오로지 '북한 사람들을 위한 북한'을 주장하는 배타적 극우성향의 정당들이 주민들의 인기를 얻지 않도록 경계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2. 북한 지역의 민주화 및 민주적 정당 활동 기반 조성 및 지원 프로그램

통일한국이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국가가 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민주화와 민주주의 정당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어떤 정치 체제 환경에 처해 있는가에 따라 지원 방법과 규모, 프로그램 등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통일 이후 북한의 상황에 따라라도 북한 민주화 및 정당제도 활성화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현실적인 민주주의 확산 방식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세 가지 상황은 김정은 체제가 존속해 있을 경우와 김정은 체제가 붕괴됐을 경우, 북한에 민주주의적 발전을 지향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본다. 하지만 각각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다.

가. 김정은 체제가 존속하는 상황

(1) 김정은 체제가 정치적 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현재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대내외적으로 일련의 개혁적 제스처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개혁과 특구 활성화 전략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들은 파탄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경제에 국한된 개혁이며 정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여전히 북한에선 '정치적' 발언이 '정치범'으로 낙인찍히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김정은과 노동당, 사회 제도 등에 대해 가까운 지인끼리도 속을 터놓고 이야기 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1년부터 탈북하는 주민들을 현장에서 사

살하는가 하면 중국과의 통화를 하는 경우 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에 보내고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이 말하는 소위 '혁명의 모기장'을 더욱 몰살틈없이 두르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민주화 또는 정당 활동 기반 조성 노력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외부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언급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보복과 타격을 운운하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 민주화를 위한 어떠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외부적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북한 주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목표를 갖고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대북방송을 들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주민들의 민주주의적 사고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즉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발전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으며 통제되고 폐쇄된 국가에서는 주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눈을 뜨므로써 점차 자신들을 통제하는 정치체제에 반항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이 지나친 서구적 관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이 일정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이론 하에 민주적 발전의 주요한 구성요소로서의 경제개혁 혹은 자유 시장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에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폐쇄적이지 않은 국가들에서조차 경제적 지원이 꼭 정치적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더구나 북한처럼 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압적이며 사소한 변화도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과연 외부의 경제적 지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김정은 체제가 경제개혁을 가속화하는 경우

현재 김정은 체제는 농업개혁과 특구 개방 전략, 새로운 경제관리정책 도입 등 일련의 경제 분야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현재로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김정은 체제가 존속되는 한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체제의 유지이며 경제개혁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경제개혁 외중에 체제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은 언제든지 다시 문을 닫고 개혁 조치를 후퇴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제의 변화는 주민들의 의식 역시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

새롭게 형성된 시장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하는 신흥 부호들과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 질서에 의존한 특권 계층 사이에 반목과 충돌이 빈번해질 것이다. 또한 경제개혁의 수혜를 입은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사이에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돼 사회 갈등이 증폭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시작돼 점차 정치적 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동유럽의 경제개혁 과정을 보면 경제수준이 낮고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은 사회일수록 경제 변화에 따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반면,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성과는 미미하여 주민들의 기대가 일순간 실망과 불만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제개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상당히 진척된다면 김정은 체제가 정치적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정책으로 회귀하려 해도 경제개혁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외부 국가들은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낼 민주주의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기보다는 경제적 변화를 고무 추동해 김정은 체제가 다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효과와 효율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체제가 경제개혁을 가속화하는 경우 한국이 현실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북한 경제의 남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우리가 북한 경제를 좌우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놓는 것이다.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에 시장친화적 법제도를 유도하고 개혁과 개방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아야 통일이 됐을 때 남과 북의 간극이 크게 해소돼 쉽게 하나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북한 내 엘리트들을 친한파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개혁 지원은 광범위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남북한 엘리트들의 광범위한 인맥과 친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 내 많은 엘리트들을 앞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에 저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만든다면 앞으로 통일 과정이 훨씬 수월해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이들을 활용해 북한에 민주주의적 질서를 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김정은 체제가 붕괴해 급작스러운 통일이 찾아오는 상황

지난 기간 대다수의 남쪽 학자들이 연구해 온 통일 시나리오는 주로 3개 단계를 거치는 연방제 통일방안이었다. 남북이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통일로 접근한다는 시나리오는 이론상으로는 가장 이상적일진 모르지만 현실적 가능성으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통일을 위해 북한체제를 남북연합의 조건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을 세습해 가면서 북한을 하나의 봉건 영지처럼 만들어 온 김정은 체제가 남북통일을 위해 자기

들의 기득권을 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통일시나리오는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루어지는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을 포함한 외부 세계는 최단 시간에 북한에 민주주의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정교하게 이뤄져야 하는 광범위한 작업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들은 외부에서 단순히 강요한다거나 주입한다고 이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라크의 사례는 민주주의를 외부에서 강요할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로의 추동력은 반드시 북한 주민들이어야 하며 외부 세계는 이들이 단기간에 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북한체제 붕괴시 한국은 선거와 선거 과정, 정당제도 구축, 의회 구성, 사법제도 완비, 시민사회 구축, 자유 언론 육성, 시장경제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도와야 한다. 이 절에서는 크게 북한의 급변사태 시 북한 정세를 안정화시키며 이후 안정성을 토대로 정치사회 분야를 민주화하는 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현실가능성이 비교적 높은데다 현재 가장 예측하기 쉬운 주제인 까닭에 이 절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

(1) 북한체제 붕괴 직후 한국의 역할

김정은 체제가 붕괴해 한국이 북한의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안정을 만드는 것이다. 북한체제 붕괴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상계엄을 통해 군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비상통치 기간에는 현존하는 북한의 치안기구를 한시

적으로 활용해 혼란 유인세력이나 반란 세력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군부나 보위부 등 북한체제를 적극적으로 떠받들어 온 세력은 불능화하거나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보안부(경찰)와 같은 치안기구는 사회 안정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내걸고 일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공적에 따라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 재임용할 수도 있고, 또는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경감해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북한과 같이 살아있는 우상을 섬기는 국가는 우상의 대상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구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반항을 할 동력이 사라진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종교적 이념에 기초해 외부 점령 세력에 극렬하게 반항한 이라크나 아프간과는 전혀 다르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면 구체제를 위해 저항할 세력은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북한에서 살아온 탈북자들의 공통된 예측이다. 하지만 북한이 반세기 넘게 군사 국가로 존속한 까닭에 전국 어디나 넘쳐나는 무기는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무기고가 통제되지 않으면 이는 오랫동안 북한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의 치안까지 위협하는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체제 붕괴시 김정은 체제의 핵심 가담자들은 신속하게 격리 단죄하거나 무력화해 격리시키는 것이 사회의 혼란을 막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인적 청산은 단죄의 대상에 대한 선별과 징벌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진행해야 한다.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반세기 넘게 사회적 갈등이 증폭돼 온 남쪽의 사례를 감안할 때 북한에서 김 씨 일가 추종세력에 대한 징벌은 향후 북한 사회의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처벌은 최대한 적게 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민심을 수습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식량 및 생필품의 지원으로 시장의 식량가격을 안정화시키고 한국의 통치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여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 사회 질서가 통제되기 시작한 이후 한국의 역할

북한에 사회질서가 어느 정도 바로 잡히면 그때부터 선거를 통한 지역별 행정기구 구성, 과거 통치 세력에 대한 인적 청산, 노동당의 해산과 여러 정당의 출범, 구 엘리트층의 재교육, 각종 법 제도 정비, 시민사회 구축, 자유 언론 육성 등의 조치가 잇따라야 한다.

이때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를 통한 지역 행정기구 수립이다. 북한에 남한 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행정기구를 만드는 방법과 지역별 자치 행정기구를 수립하는 방도 중 이상적인 방도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별 행정조직을 구성하게 하고 한국과 국제사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한국의 엘리트와 북한의 엘리트들이 반반씩 참여하는 행정기구 구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만약 남한이 들어가 직접 지역별 행정기구를 만든다면 북한 주민들은 더욱 소외 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는 오랫동안 치유하기 어려운 남북 지역갈등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통일한국의 정치 체제는 남한 지역 출신 인사들에 의한 권력 독점을 피하고 북한 엘리트들에게도 새로운 정치체제에서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북한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북한에 주민들 스스로의 행정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체제의 엘리트들을 어느 정도까지 참여시키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일당 독재체제가 유지돼 왔고 개혁 경험의 부재로 인해 개혁을 위한 대안세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독재 통치의 하수인 역할을 해왔던 구체제의 엘리트들이 대거 선거에 나서게 되어 결국 주민들의 불만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제 엘리트들의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가) 북한 지역 선거 및 지원 프로그램

북한체제 붕괴 후 비상통치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지만 이를 하루 빨리 북한 주민들도 참여하는 자치 정부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상통치 기간이 길어지면 주민들 속에서 군정 통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이는 반한 감정이 고조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하루 빨리 주민들에게 북한은 북한인에 의해 통치된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지역 행정기구가 완성된 뒤 북한을 대표하는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치르며 이 의회가 남한의 국회와 대등한 위치에서 북한의 발전을 의논하는 형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의회 구성 선거는 지방자치 선거에 비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의회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당에 의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북한에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드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 자치 단체장을 선발하고, 각 지역별 의원을 뽑는 선거는 정당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자치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굳이 어느 정당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신망받는 인물들이 나서 임명돼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무소속으로 지방 의회를 채우고 이들이 나중에 북한에 정당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한국의 정당이 진출하면 그때 당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선거법을 따르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법을 만드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한국도 과거에 여러 형태의 선거제도를 경험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데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약간 변형해 북한에 도입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독재체제에서 해방돼 민주주의적 선거를 진행하는 국가들에서도 선거법을 둘러싼 충돌은 크지 않다. 심지어 선거를 치르기에 미흡

한 환경이었던 리비아에서조차 선거는 무난하게 치러졌다.

또 북한 주민들도 선거를 진행한 경험은 많이 갖고 있다. 물론 100% 투표 100% 찬성을 자랑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올바른 민의에 의한 선거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투표소에 가서 어떤 절차로 투표를 하는 지에 대해선 잘 알고 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은 선거는 죽지 않았다면 응당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 참여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자치 기구를 구성하는 선거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북한에 여러 정당이 구성된 뒤 이를 토대로 한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북한에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선 북한 실정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선거법을 만드는 과정에 탈북자 출신 전문가들도 참여시킨다면 북한 실정에 맞는 선거법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선거법은 북한의 반발 때문에 공개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물밑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또한 북한에 민주주의적 선거를 진행하는 상황이 오면 투명한 감시 및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감시요원을 양성해 북한의 각 군 단위까지 파견할 필요성이 있다. 민주주의적 선거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 출신의 선거감시요원이 파견되어야만 북한 지역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를 담보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한국의 총선 때 5,000여명 규모의 부정선거감시요원을 운용했다. 급작스러운 통일이 오면 이들 요원 중에서 북한에서 활동할 인력을 뽑아내야 한다. 북한에는 약 200여개의 군, 구역이 있다. 한국 정부가 각 군과 구역에 2명 정도 파견하고 나머지 감시요원은 북한 현지에서 선발해 훈련시킨다고 가정하면 약 400~500여 명의 선거감시요원이 북한에 파견돼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리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 어떤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북한의 신문 방송과 언론 매체를 통해 널리 광고해 북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은 11년제 의무교육제도 하에서 누구나 중학교까지는 마쳤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다. 이 때문에 선거 방법에 대한 잡음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방 행정기구가 구성된 뒤 이를 어떻게 운영하며 각 기구에 어느 정도의 한국 출신 행정인력이 파견되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이번 연구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약한다. 다만 분명한 것은 통일 초기엔 많은 한국 출신 행정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북한에서 훈련된 인력들이 한국 출신들을 대신할 것이라는 점이다.

(나) 새로운 정당 창설 및 지원프로그램

북한에 북한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을 창설하는 것도 통일 한국의 중요한 과제로 나서게 된다. 독일의 경우 동독을 지배하던 사회주의 통일당은 통일과정에 민주사회당으로 변신해 2007년까지 명맥을 유지했다. 그 과정에 대해선 앞의 연구에서 비교적 자세히 언급된 까닭에 생략한다.

문제는 북한의 붕괴와 함께 조선노동당이 독일의 사회주의통일당의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현재 조선노동당은 사실상 북한 지역의 유일정당으로 약 400만 명의 당원을 갖고 있다. 이럴 듯 방대한 당원 규모를 자랑하지만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경우 조선노동당이 독일의 사회주의통일당처럼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 이유는 우선 북한 붕괴로 인해 노동당의 핵심 수뇌가 모두 재판대에 올라야 하는 까닭에 당 조직들이 와해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 조선노동당은 창립 이후 67년 동안 북한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원죄를 갖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으로 100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굶어죽었고 또 수백만 명을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확실한 모든 죄가 노동당원들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

조선노동당이 존재할 수 없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당은 김일성 일가를 위한 개인의 정당이라는 점이다. 당 규약 모두가 김 씨 일가를 위한 것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면 당의 존속 이유 자체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선 당원들이 노동당원임을 숨기기에 급급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에는 한국의 정당들이 적극 진출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들 정당들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내걸고 구애를 할 것이다. 하지만 태생이 남쪽에 뿌리를 둔 정당이 북한 주민들의 환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남쪽 정당의 북쪽 진출은 주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북한 정당 설립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 이후 남북한 간에 형성될 감정의 골 또한 북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창설을 돕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당은 북한 노동당과는 태생 자체가 다르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자체로 정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재정적으로도 열악해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과 외부 세계는 이러한 북한 자생적 정당들의 창설과 활동에 대해 적극 조언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의 정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일련의 딜레마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유는 북한에 강력한 정당이 형성되면 남쪽과 북쪽간의 지역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론상 만약 북한에 조선노동당처럼 강력한 유일정당이 건설돼 북한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등에 업고 통일한국의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여러 개로 나누어진 한국의 정당들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 최대 정당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에 여러 개의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정당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 형성된 남쪽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지역별 대결과 갈등을 부추겨 지지를 얻으려는 극우 또는 극좌 정당이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에는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과 정당 활동 노하우를 전수하며 그렇지 않은 당은 차별적으로 억제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다) 노동당 및 구시대 잔재 청산 및 지원 프로그램

한국의 민주주의가 북한에 건전하게 안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북한의 노동당 세력을 위시한 지배 권력의 청산이다. 친일과 청산을 제대로 못해 지금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남쪽의 사례가 북한에서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

70년 가까이 북한을 통치해 온 노동당 지배층은 반대파를 가혹하게 숙청하는 등 수많은 죄를 저질렀다. 이런 죄에 대한 단죄 없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간다면 이는 북한에 수십 년 동안 이어질 분란의 불씨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처벌의 범위에 대해 매우 심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되기 전이라면 북한 엘리트들의 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포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통일된 이후엔 처벌을 포용의 원칙에서 한국의 잣대로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아무리 흉악한 강력범이라 해도 사형을 실질상 집행하지 않아 국내에서도 반발이 크다. 반면 북한은 소를 훔쳐 먹어도 공개처형시킬 정도로 매우 가혹한 법제도를 갖고 있다. 만약 통일 이후 북한의 범죄자들을 한국의 사법제도에 기초해 처벌한다면 이는 북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서 오히려 처벌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왜 우리 가족을 죽인 죄인을 남쪽 판사가 제 마음대로 용서해 주는가하는 비난이 확산된다면 이

는 남과 북의 불신과 반목을 키우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구체제 핵심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북한 주민들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한 데 기초해 국제적인 법률의 기준을 고려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의적인 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구시대 반인륜적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에 있어 이들의 죄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김정은 체제 붕괴 이후에 북한의 주요 문서를 구시대 전범들이 폐기할 틈이 없이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노동당이나 보위부, 보안서 등에 보관된 문서들을 폐기 또는 약탈에서 막는 기관의 창설이 시급한 이유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들은 통일 독일에서 1992년 1월 '슈타지 문서관리법'을 발효했던 것처럼 적법한 국가의 법에 따라 활용돼야 할 것이다. 이런 객관적 자료에 기초해 구시대 청산 작업이 진행되어야만이 새로운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 붕괴 후 북한에는 지역 통치를 담당할 엘리트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반 기술 관료층, 중하위 엘리트 등에 한해서는 현지에서의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유능한 인재를 남쪽에서 재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남쪽의 이론을 배운 북한 엘리트가 북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북한 엘리트 재교육 및 복귀와 함께 한국에 있는 2만5,000여 명의 탈북자 중에서 우수한 청년 인재들을 선발해 북한에 적극 진출시키는 것도 역시 같은 효과가 있다. 북한이 붕괴된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 엘리트 육성을 제도적으로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 엘리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라) 자유 언론 육성 및 시민 사회 구축 지원

언론은 사회적 여론 형성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 성공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선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언론의 영향력이 지대하다. 현재 북한에는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 등 방송 신문 매체들이 존재한다. 이들 언론들이 현재는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충실한 나팔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면 민주주의적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우선 북한 기존 언론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의 제호를 바꾸되 방송 송출 및 신문 인쇄 장비와 인력은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북한 언론인들을 재교육시켜 활용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에서 언론인은 본질상 노동당 선전일꾼이고 글 쓰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전혀 다른 선전 및 홍보 기사 위주로만 써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언론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이 체제가 바뀐 뒤 입장을 확 바꾸어 기사를 써봤자 주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이런 까닭에 북한의 언론인을 재교육시켜 활용하기 보다는 아예 언론인들을 새롭게 양성시키는 것이 훨씬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에는 당연히 한국의 언론들이 진출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을 기반으로 하는 언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국내 언론사들과 연계해 북한 언론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주언론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북한 출신 언론인들을 키워낼 필요성이 있다.

북한의 시민사회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정치 및 사회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식하는 것은 남과 북이 진정한 하나의 통일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통일은 제도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서적인 분야를 총괄하는 내적 통일도 함

게 달성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민단체 육성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김정은 체제의 붕괴에 따른 민주주의적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적극 전달하는 메신저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민단체 육성을 위해선 정부의 주도적 노력보다는 한국 내 존재하는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북한에 들어가 활동하면서 북한 주민들과 손잡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 북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시민단체의 활동에 참가해 운영의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다. 북한에 민간단체들이 많아지면 새로운 북한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우수한 인재들을 자연스럽게 발굴 육성할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3)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Konrad-Adenauer-Stiftung)의 활동 사례로 본 남북 통합의 시사점

(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활동과 정치교육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은 1955년 설립되었다. 평화, 자유, 정의를 기본 이념으로 민주주의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치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동독에 급변사태가 발발하자 아데나워 재단은 동독팀을 결성해 혼란기로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하였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 동독은 최대 혼란기를 맞았다. 동독탈출이 이어지고 라이프치히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반 사통당, 통일의 구호가 퍼졌다. 독일 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의 활동도 본격화 되었다. 아데나워 재단은 동독팀을 구성해 동독 현장에 파견했다.

월요데모 현장을 영상에 담고 민주화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원탁회의에 참여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교회 및 시민단체의 지도자들과 접촉을 유지했다. 변화의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문역이 되었다. 1990년 1월에는 변화의 영웅 라이프치히에 동독 최초의 콘라드 아데나워 사무소를 개원했다. 이어 동독 5개주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두었다. 그리고 1991년에는 막데부르크에 위치한 벤데그라벤 성(Schloss Wendegraben)을 매입해 중앙연수원을 오픈했다. 벤데그라벤 성은 서독 아이히폴츠 성(Schloss Eichholz)에 이어 두 번째 중앙연수원이다.

초기 아데나워 재단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해 정치 초년생들과 교사, 학생, 청소년, 경찰들에게 새로운 체제 하에서 민주시민으로 갖춰야 할 소양들을 교육했다.

① 정치초년생 지원 프로그램: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동독 혼란기에 동독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아데나워 재단은 무엇보다 자유선거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실시하는 것이었다. 시민단체 지도자들을 만나 사태의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시민 지도자들에게 민주주의에 있어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교육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 일정을 함께 논의하고 국가의 본질, 법치국가에 대해 자문해 주었다. 특히 교회 밖 최초의 시민운동이었던 뉴포럼(Neues Forum)과 민주봉기(Deutscher Aufbruch)의 조직과 정당활동을 자문해 주었다. 민주봉기는 현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배출한 당으로 선거 후 기민련과 합당했다. 이들 단체의 창당 선언문에는 아데나워 재단의 가치가 잘 드러나 있다.

당시 시민단체 지도자들은 정치 초년생에 불과했다. 사통당 일당 독재체제에서 성장한 이들을 상담해주고 자문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아데나워 재단은 이들 정치 초년생들에게 의회정치 하에서의 의사결정과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전문지식의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자문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일반주민들의 관심이 일상생활의 문제로 이전되었다. 실업문제, 환경, 육아와 관련된 문제를 상담해주고 동서독 주민들의 동질감 확대와 이질감 해소를 위한 여러 행사도 곁했다. 세미나, 토론회에 사람들이 몰렸고 상담 창구는 늘 붐볐다.

② 지방자치제도 교육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와 5월 5일 지방자치선거 결과 일시에 많은 정치초년생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의회주의, 정당정치, 법치주의 등 모든 것이 생소했다. 아테나워 재단은 민주정치,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및 민주사회의 다양한 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매회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세미나가 끝나면 추가 질문이 폭주했다.

초기 세미나나 교육은 서독의 아테나워 재단에서 이루어졌다. 동독에서 행사를 치르기에 관련 시설이 미흡하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동독 참가자 및 교육생을 배려하고 동서 간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행사에는 서독인을 동참시켜 운영하기도 했다.

세미나 및 교육의 단골 주제는 역시 민주주의 기본질서, 시장경제, 법치국가들이었다. 하지만 참가자에 비해 행사가 적어 홍보용, 교육용 책자를 만들어 분배해야 했다.

③ 역사적 증인과의 대화

과거 동독의 폐쇄적 사회를 경험했던 산증인들은 학생, 청소년들에게 많은 교훈이 된다. 동독 급변기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들과 청소년들이 만나 대화를 통해 시대적 상황을 경험하는 것은 동독 청소년은 물론 서독 청소년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준다. 이는 직접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교육 효과가 매우 크다.

다음은 학생들과 동독 국경수비대원이었던 Manfred Z.의 대화내용이다.

Wann wurden Sie geboren?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 “Ich wurde am 13.August 1956 in der DDR geboren.” 1956년 8월 13일 동독에서 태어났습니다.

Wie alt waren Sie als die Mauer gebaut wurde? 베를린 장벽이 세워질 당시 몇 살이었습니까 ?

→ “Als die Mauer gebaut wurde war ich 5 Jahre alt” 5살 이었습니다.

Haben Sie den Mauerbau überhaupt schon richtig wahrgenommen? 베를린 장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

→ “Nein, nicht wirklich. Ich war ja auch noch sehr klein.” 없었네요, 당시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Hat der Mauerbau sie mit Freunden, Verwandten oder ihrer Familie auseinandergerissen? 장벽으로 친구, 친척이나 가족들이 흩어졌나요?

→ “Ja leider, mit meinem Onkel, meiner Tante und noch vielen Freunden.” 네, 삼촌과 이모 그리고 여러 친구들과 헤어졌습니다.

In welchem Teil Deutschlands haben sie denn früher gelebt? 어린 시절 독일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

→ “Ich habe als Kind in der damaligen DDR gewohnt, am Alexanderplatz, Mit 18 Jahren bin ich dann in den Westen geflüchtet.” 어린 시절 구 동독 알렉산더 광장 부근에서 살았습니다. 18살 때 서독으로 탈출했습니다.

Hätten sie vielleicht lieber in einem anderen Teil Deutschlands gelebt? 서독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습니까 ?

→ “Als Kind fand ich den Osten ganz OK, doch als ich dann älter wurde, wollte ich natürlich im Westen leben.” 어릴 때는 동독이 좋았

는데 나이가 들자 서독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Gab es irgendwelche Vor- und Nachteile ihrer Meinung im Osten? 동독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

→ “Ja, also Nachteile gab es schon ziemlich viele wie zum Beispiel kein Fernseher (wenn man einen hatte konnte man nur Ostfernsehen sehen), kaum Telefon, wenig Obst und nicht so viel zu Essen. Vorteile gab es aber auch, wir haben zum Beispiel mehr Sport in der Schule gemacht und eine gute Erziehung gab es auch.” 단점은 너무 많죠, TV도 없었고 전화기도 드물고 채소와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Haben sie noch Erinnerungsstücke an die Zeit im Osten? 동독 시절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까 ?

→ “Ja, ich habe ein Foto wo ich Grenzsoldat bin, weil ich mit 17 Jahren Grenzsoldat war. Ich habe auch noch meinen Lehrvertrag und meine Zeugnisse.” 17살에 국경수비대가 되었고 그 시절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학습표와 성적표도 있습니다.

Sie sind doch damals aus dem Osten nach Westen geflüchtet, könnten sie mir dazu vielleicht was erzählen?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줄 것이 있나요 ?

→ “Also ich bin mit 18 Jahren aus dem Osten geflüchtet. Dort, wo ich Grenzsoldat war, mussten immer zwei Männer für eine Woche die Grenze bewachen. Die Männer waren immer nur eine Woche zusammen, dass sich keine Freundschaft entwickeln konnte. In der einen Woche, wo ich mit einem netten Mann zusammen an der Grenze stand, haben wir uns ziemlich gut verstanden. Da wir beide vom Osten weg wollten, hatten wir eine Flucht geplant, aber dass war ziemlich schwierig, weil wir erst wieder nach Monaten zusammenkamen. Ich dachte schon, dass wir nie wieder zusammenkamen, aber kamen wir. Als wir dann endlich flüchten

wollten, war dies wiederum sehr schwer, da wir Hundesperren und Minengürtel überwinden mussten. Als wir dann im Osten waren sind wir erstmal 1 Stunde dort rumgelaufen, bis wir schließlich mitten in der Nacht eine Kneipe gefunden haben. Da die Leute dort drinnen erkannt haben, dass wir Grenzsoldaten aus dem Osten sind, kam der Bundesgrenzschutz und hat uns erstmal nach München zur Nato geschickt. Nach 6 Wochen mussten wir nach Gießen oder wenn wir uns nachweisen konnten, durften wir dort leben. Ich konnte mich nachweisen und habe dort dann eine kleine Wohnung bekommen.” 18 살 때 동독을 탈출했습니다. 국경수비대원 시절 2명이 일조가 되어 일주일 간 국경수비를 했습니다. 일조 2명은 일주일만 함께 근무하도록 해 우정이 싹트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한 주간은 좋은 대원을 만나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나처럼 동독 탈출을 위해서 탈출계획을 세웠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와 다시 만나기까지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그와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짝이 된 것입니다. 마침내 탈출의 기회가 온 것이죠. 하지만 경비견을 따돌리고 지뢰밭을 피해야 했습니다. 1시간 가량 달리다 보니 한 밤중에 작은 술집이 있더군요. 손님들이 동독 국경수비대인 것을 알아차리고 서독 연방국경대원이 와 저희들을 뒤편에 있는 나토사령부로 보냈습니다. 6주 후에 기센으로 이동하든지 신분이 확인되면 뮌헨에 머물수 있었죠. 저는 신분이 확인되어 작은 집을 받아 지낼 수 있었습니다.

Warum sind Sie denn überhaupt geflüchtet? 왜 탈출한거죠 ?

→ “Ich und mein Freund wollten ein anderes Leben, auch mal reisen, ein Auto besitzen und auch einen Fernseher, einfach frei sein!” 저와 친구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죠. 여행도 해보고, 자동차도 갖고 TV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저 자유를 원했죠.

Wie lange haben Sie dann noch dort im Westen gelebt, bis die Mauer fiel? 베를린 장벽이 해체될 때까지 얼마간 서독에서 살았습니까 ?

→ “Ca. 10 Jahre” 약 10년입니다.

Wo haben sie dann im Westen gelebt? 서독 어느 지역에서 살았죠 ?

→ “In Gelsenkirchen (BRD)” 겔젠키르헨에서 살았습니다.

Waren sie denn auch traurig, weil Sie von ihrer Familie und Freunden getrennt waren? 서독에 사는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과 헤어져 슬펐나요 ?

→ “Ja, ich dachte am Anfang, dass ich sie nie wieder sehen werde.”

처음에는 결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Wie haben sie dann durch den Mauerfall erfahren? 어떻게 장벽이 헤쳐된 사실을 알았나요 ?

→ “Durch das Fernsehen.”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Wie lange hat es dann gedauert, bis Sie in den anderen Teil Deutschlands gekommen sind? 다시 동독 땅을 밟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

→ “Ich bin sofort zu meiner Familie gefahren” 즉시 가족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학생, 청소년들이 국경수비대원의 탈출 스토리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통해 과거 동독의 삶과 현실을 접하게 된 것이다.

④ 대학교수 지원 및 도서관 건립 프로그램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완성됨에 따라 동독 내 대학에도 변화의 바람이 몰아닥쳤다. 무엇보다 마르크스 엔겔스에 기초한 정신과학, 사회과학에 대한 일대 개혁이 일어났다. 관련 과목이 폐쇄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학과로 대체되었다. 교사와 교수들도 대학을 떠났다.

아데나워 재단은 교사·교수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한 학교에 적어도 한 명의 교수가 충원될 수 있도록 했다. 새 체제에 걸맞은 행정학, 역사학, 경제

학, 사회학, 국가학 등을 가르칠 교원을 찾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서독의 저명한 학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동독의 여러 대학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아데나워 재단은 이와 함께 도서관 건립 프로그램도 추진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배우고 싶은 동독인은 비록 정치인들에 국한하지 않았다. 일반 주민에 대한 교육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건전한 시민사회가 조성될 수도 없다. 아데나워 재단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해도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

홍보와 교육 자료들이 출판·배포되었고 수십 종의 소책자들이 주제별로 만들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데나워 재단은 새 체제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를 갖춘 도서관 건립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세미나, 토론회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일이었다. 동독 곳곳에 도서관이 들어서 동독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했다.

⑤ 통일 22주년(2012) 프로그램

2012년 독일은 통일 22주년을 맞이했다. 동독 혼란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확립과 발전을 위한 아데나워 재단의 역할은 다양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통일독일에 또 하나의 특별한 과제가 부여되고 있다.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소위 '동독 향수(Ostalgie)'라는 특수한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 상존하고 있는 동서 간의 경제적 격차, 저 임금, 부족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한 불만이 과거 동독에 대한 향수로 모아지고 있다. 동독 5개주를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좌파당(Die Linke)은 이러한 동독 향수의 결과이다.

이런 현상은 유럽연합(EU)을 이끌고 있는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 각종 동독 재건 프로그램을 통해 동서 간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왔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아테나워 재단은 다음과 같은 현상에 적극 대응해 '동독 향수' 현상의 피해를 막고 있다.

첫째, 동독 신비주의이다. 서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일상생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2000년대 중반부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동독 사회와 사통당 일당 독재시대를 미화하는 일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산체제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세력과 아직 어린 학생 및 청소년들 사이를 파고들어 동독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테나워 재단은 주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 전시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과거 동독 사회의 실체를 사실대로 알리고 있다. 분단 시절의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989년 여름 시작된 동독 탈출에서 월요데모의 시위현장을 녹화한 자료들을 활용해 구 동독체제를 미화하려는 작업을 차단하고 있다. 강의 시리즈나 홍보 출판에는 "Wie war das Leben in der DDR?"(동독 생활은 어떠했을까?)이 빠지지 않았다. 또한 동독 공산독재를 경험한 산 증인들과의 대화 프로그램도 학생, 청소년들이 동독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효과가 크다.

재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Mytos und Wirklichkeit 신비와 현실'⁶⁴⁾에는 구 동독 독재사회, 사통당 일당독재의 실체, 동독 급변사태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둘째, 극단적 포퓰리즘이다. 통일 직후 1991년 9월 동독 작센 주 호이어스베르더(Hoyerswerda)에는 수차례 외국인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극단주의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숙소를 공격해 아프리카, 베트남, 루마니아, 이란 출신자 등을 위협하고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통일 후 시장경제로의 체

64) www.DDRmytos.de.

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던 대량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발단이었다.

동독 북부에 위치한 로슈톡(Rostock)에서도 외국인 기숙사 방화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과 주민들의 무언의 응원으로 충격을 주었다. 과거 히틀러의 명령이 되살아났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후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네오나치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 데어 슈피겔(Der Spiegel)은 1991년 제40호에서 외국인 테러사건을 표지기사로 다뤘다.⁶⁵⁾ 독일 사회는 한목소리로 네오나치의 재등장을 경고하고 확산을 막았다. 언론, 시민, 정당, 교육기관 등 모두가 민족주의를 경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외쳤다.

통일 20돌을 맞은 독일에 좌파당(Die Linke)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극우파 민족민주당(NPD)이 고개를 들고 있는 현상에는 이런 극단적 포퓰리즘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좌파당에 이어 민족민주당이 세력을 불려가고 있다. 민족민주당은 현재 동독 2개주(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지방의회에 진출해 있다. 좌파당은 과거 동독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복지 확대를 내걸고 있고 민족민주당은 실업 문제를 이슈로 삼아 외국인 노동자들을 배척하고 있다.

아테나워 재단은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나치 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사회적 현안들도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통일의 당위성, 통일독일의 정치적, 경제적 힘, 슈타지의 과거행적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2009년 한해 동안 아테나워 재단이 개최한 행사만 400회였고 65회는 숙박을 포함한 2~3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동서 간의 격차를 줄이고 동질성을 확대해 가고 있다.

65) "Lieber Sterben als nach Sachsen"작센 주로 가느니 차라리 죽는게 낫다"라는 외국인의 푸념을 기사 첫머리에 올린 데어 슈피겔은 커버스토리(Hass gegen Fremde 외국인 증오)로 동독 사회에 만연한 외국인 증오문제를 심층 보도했다. *Der Spiegel* (Heft 40, 1991)

무엇보다 독일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발전, 사회적 시장경제 및 유럽연합 틀 속에서의 독일사회가 아데나워 재단의 핵심적인 아이템이다.

(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활동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동서독 통합 혼란기의 아데나워 재단의 활동은 한반도의 통일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아데나워 재단과 같이 통일을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재단은 없다. 하지만 정부 산하에 통일부가 존재하고, 북한이탈주민후원재단이 탈북자들의 교육과 정착을 통해 장차 북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있다. 또 중앙선관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되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재단 이상의 지원 기관을 구축해 활동할 수 있다.

우선 아데나워 재단이 독일 통일의 첫 단계에서 수행한 첫 사업이 중앙연수원을 만들고 자유선거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아데나워 재단의 이러한 활동은 현재 한국의 중앙선관위에서 담당해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중앙선관위의 선거연수원은 북한의 정치 초년생들과 시민단체 지도자들을 선발해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의회정치 하에서의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이들 중에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이들을 선발해 정당 활동을 자문해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4) 항목에 따로 서술한다.

아데나워 재단이 실시했던 역사의 증인과의 대화 등은 국가인권위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록을 활용해 할 수 있으며 대학지원교육은 한국의 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주목되는 점은 동독에서 통일된 지 20년이 지나자 과거 정권에 대한 향수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독일과는 달리 통일 한반도의 북부에서는 그

러한 현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주의권에서 경제력과 삶의 질이 선두권을 달렸던 동독과는 달리 북한은 과거의 신비주의적 향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남쪽의 차별적 대우에 반발해 극단적 포퓰리즘은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사회적 현황도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꾸준히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프로그램 구축에 있어서 중앙선관위가 한국의 과거 민주화 정권 이양 단계에서 쌓아둔 다양한 경험을 활용해 북한에 대입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북한 민주화 및 민주시민 정치교육 과정에서의 중앙선관위의 지원 가능 프로그램

(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 정치교육의 필요성

분단된 국가의 통합에 있어서는 체제통합 뿐만 아니라 주민 간 동질성의 회복을 통한 정신적 통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바, 통일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 주민 간 이질감의 심화로 인하여 통일 후 안정화 단계까지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주시민정치교육의 실시가 최대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관의 정립에 초점을 맞춘 통일 전 교육에 비하여, 통일 후 교육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이해시키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함양을 목표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 오랜 기간 폐쇄된 체제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만큼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며, 교육범위에 있어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교육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통일 초기에는 체제통합에 따른 민주선거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에 앞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와 선거절차에 대한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통일대비 민주시민 정치교육 인프라 구축

① 민주시민정치교육원 설립

통일 되면 일반국민 대상 정치교육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해 현 선거연수원을 민주시민정치교육원으로 명칭변경 및 확대·개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기관으로서 민주시민정치교육원을 우선 설치하고, 2단계로 권역별 거점단위 민주시민정치교육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정치교육지원법 제정

전 국민 대상(통일 후 북한 주민 포함) 민주시민정치교육의 실효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독립법안 제정이 시급하다.

정치교육에 대한 중추기관으로 위상 정립, 전문성 확보,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 책정 근거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③ 전문 연구기관 설치

급변하는 정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일대비 북한 주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이론적 체계 확립을 위하여 민주시민정치교육원 내에 연구기관 설치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기관은 선거, 정당, 정치교육 등 각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 및 주요현안에 대한 이론을 제시해야 한다.

(다) 민주시민정치교육 전문가 양성

① 민주주의, 선거, 정당 등 정치 분야 전문교수 확보 및 프로그램 구성

북한에 시민 및 선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 전임 직원, 외부전문가를 전문교수로 충원·활용하는 방안이 일차적이며 모자라는 인력을 한국의 각 대학 교수진 중에서 충원할 수 있다.

교육의 대상에 맞게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추적 조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참여시켜 프로그램의 합리성을 검토한 뒤 북한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후 다양한 검증을 통해 이를 수정 보완 발전시켜 북한의 사례에 가장 적절한 모델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② 강사요원 모집·양성

위에서 언급한 전문 교수가 북한의 모든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강연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전문 인력이 소요된다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가진 교수들은 현장에서 뿔 강사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북한 지역별 교육은 강사요원에게 맡기는 안이 적절하다.

정치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유명인사, 각급 기관·단체 간부 등 강의능력이 우수한 자를 강사요원으로 육성·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모집된 강사요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 및 심사 후 지역단위 집회·모임 등에 강사로 투입할 수 있다.

(라) 북한 주민 대상 교육 및 연수방안

① 기본원칙

민주시민정치교육은 그 특성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상호주의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에 북한의 특수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

② 교육 및 연수 대상

통일한국의 초기에는 모든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교육은 우선 북한의 민주주의를 도입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인력 양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선거에 나설 후보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가장 우선된다고 볼 수 있다.

또 북한에 탄생할 정당의 관계자와 당원들의 교육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이들의 활동이 곧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후 점차적으로 교육을 유권자, 학생 등 미래 유권자 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③ 교육 및 연수의 실천적 방법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폐쇄적 체제하에서 운영되어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절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으므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선거의 개념 등 기초수준의 맞춤형 커리큘럼을 편성해 운영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민주시민정치교육은 당 간부 등 지도층에서부터 유권자인 일반 주민과 미래유권자인 각 급 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점진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상과 여건에 따라 출강 또는 집합교육 형식으로 하되, 교육대상의 계층별, 수준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연, 참여식 교수법, 현장체험, 토론 등 다양한 교수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④ 교육 및 연수의 구체적 내용

우선 민주주의 기본원리·절차의 이해 및 민주적 가치관 정립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정착 속도를 볼 때 적절한 교육 방법만 도입되면 이에 대한 효과는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 정치·정당·정치자금·선거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참여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아직 북한 주민들은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은 인내성 있게 끈기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정치적 참여·비판능력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행사 능력 함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로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 기타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 등을 임기응변식으로 구성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 민주주의정치교육의 기대효과

정치체제에 대한 신속한 적응 훈련으로 통일 이후 체제변화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통일 이후 예상되는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남북한 간 공동된 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남북통일 직후 합법적이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 보장으로 체계적 통일 절차 마무리에 기여할 수 있다.

체계적·지속적 민주시민정치교육의 실시로 정치·선거 참여의식 함양 및 정치·선거 참여방법 습득 등을 통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 북한에 민주주의적 발전을 지향하는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

김정은 체제가 끝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남북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담보는 없다. 냉혹한 국제사회의 힘의 역학에 의해 북한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거나 또는 북한 주민 스스로가 통일보다는 자기들 스스로의 정부 구성을 지향할 수 있다.

친중 정권이 들어설 경우라면 중국의 정치체제를 본 따 집단지도 체제에 기초한 일당제가 당분간 북한의 정치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 주민들 속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확산되는 경우라면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타협으로 독자적인 북한 정부가 출범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여론도 급작스러운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이런 방안을 찬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정부가 들어서든지 과거 70년 가까이 북한을 지배해 온 김일성 일가식 독재체제는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독재정부가 아니라면 새로운 정부는 속도와 시간에 있어 여러 요인에 좌우될 순 있지만 결국엔 주민들의 민의를 점차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한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지역의 민주화 및 민주주의적 정당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 또 국제사회도 독재체제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 가려는 국가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방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미국 등 국제사회는 미얀마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민주주의 정착 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의 민주화 지원 방안에 대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직접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기초해 가장 시급하고도 적절한 지원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김정은 체제가 막 시작된 지금 김정

은 체제 이후의 북한 민주화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은 체제의 급작스러운 붕괴에 대해선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지만 붕괴가 아닌 상황이라면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포스트 김정은 체제의 앞날에 대해선 가능성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실천적 문제 해결은 당시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남식. 『남로당 연구』. 서울: 돌베개, 1984.
- 김영탁.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 김학준. “해방후 한국 정당변천사연구.” 『국사관논총』. 제25집, 1991.
- 박상봉. “독일의 통일비용 분석과 남북통일의 방향.”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 담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_____. 『남북경제통합론』. 서울: 자유기업원 & 나남, 2004.
- _____. 『독일통일 통일한국』. 서울: 진리와자유, 1999.
- 백기완. “김구의 사상과 행동의 재조명.”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1979.
- 안철현. “해방 직후 남한의 정치세력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주의의 시각에서.”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논문, 1984.
- 이영기.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 서울: 형상사, 1990.
- 임혁백. 『대선 2012: 어떤 리더십이 선택될 것인가?』. 서울: 인텔리겐찌야, 2012.
- 조민 외. 『남북 통합대비 북한지역 정당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조한범.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통일대비특별정책연수단. 『독일통합실태연구』. 서울: 통일원, 1992.
- 한태수. 『한국정당사』. 서울: 신태양사, 1961.
- Alexander Thumfat 저 · 안미현외 역. 『동·서독의 정치통합』.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Brezinski, Zbigniew. *Strategic Vision: America and the Crisis of Global Power*. New York: Basic Books, 2012.
-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Die Teilung Deutschlands 1955 bis

zur Einheit."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233. 4. Quartal 1991.

Choo, Yong Shik. "Dilemma between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the Roh Tae Woo Administration's Engagement Policy." Ph. D. dissert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2002.

Korany, Baghat. et al.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the Arab World, Volume 2, Comprehensive Experience*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Peterson, John. "Nation-building and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Two Yemens." ed. by Pridham. *Contemporary Yemen: Politics and Historical Background* Croom Helm, 1984.

Yang, Ho-min. "Interplay of Nationalism and Socialism in Korea." eds. by Chong-shik Chung & Jae-bong Ro. *Nationalism in Korea*. Research Center for Peace & Unification, 1979

Dokument: Michail Gorbatschow zum 40. Jahrestag der DDR am 6. Oktober 1989.

Hermann Weber. *DDR Grundriss der Geschichte 1945-1990*. Hannover, 1991.

Der Bundeswahlleiter. *Pressemitteilung 14. Oktober 2009*.

『내일신문』.

『중앙일보』.

NK지식인연대 홈페이지 10월 11일자 '북한 물가 동향' 참조.

Der Spiegel.

Die Welt.

Sueddeutsche Zeitung.